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西北青年團의 暴力行爲 研究

- 濟州 4·3 事件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金平善

2009年 8月 日

西北青年團의 暴力行爲 研究

- 濟州 4·3 事件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張元碩

金平善

이 論文을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함

2009年 8月 日

金平善의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8月 日

The Study on violences of the Northwest Youth

- Focusing on the Jeju 4·3 -

Pyoung-Se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Won-Seok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olitical Science

2009.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ignature

Thesis Committee, signature

Thesis Committee, signature

2009. 8.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iii
Abstract	v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4
제2장 서북청년단의 결성	9
제1절 월남민 형성 요인	12
제2절 서북청년단 결성 동기	28
제3장 정치권력과 서북청년단	43
제1절 미군정과 서북청년단	45
제2절 이승만 정권과 서북청년단	53
제4장 제주 4·3 사건과 서북청년단의 역할	56
제1절 무장 봉기 이전의 서북청년단	56
제2절 무장 봉기 이후의 서북청년단	61
제5장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분석	73
제1절 이데올로기적 동기	74
제2절 군사적 차원의 동기	76
제3절 정치적 차원의 동기	80
제4절 세속적 차원의 동기	83
제6장 결론	86
89	
참고문헌	89

- 표 목 차 -

<표 2-1> 인구이동, 남한 1945년 10월 15일-1947년 11월 29일	10
<표 2-2> 38선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난민이동	11
<표 2-3> 북조선공산당원의 수	15
<표 2-4> 자·소작의 구성	19
<표 2-5>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몰수현황	20
<표 2-6> 1946년 9월 평남지역 중등 이상 입학생 사회성분	25
<표 2-7> 1947년 5월-6월간의 개성 전재민 수용소 월남인의 월남 동기	26
<표 2-8> 해방 후의 산업쇠퇴	35
<표 2-9> 전 직업별 실업자 수	36
<표 2-10> 상품별 물가지수	38
<표 2-11> 월남인구 취업통계	39
<표 3-1> 서북청년단의 구성	47
<표 3-2> 서청의 남선파견대와 주요 구성원 명단	48

《국문초록》

해방 후 혼란기에 서북청년단은 한국 정치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였으며, 제주 4·3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소련군의 진주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월남민들의 일부가 이북5도 청년단체들을 결성하게 되었고 이들 단체들은 서북청년단으로 통합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트리블 메이커’ 또는 ‘백색 테러단’으로 불린 이북5도 청년단체들 및 서북청년단은 반탁 정국 속에서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며 남한의 정치에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제주 4·3 연구는 무장봉기 집단이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주요한 동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진압군과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 집단의 폭력 동기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제주 4·3 사건 및 서북청년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를 ‘빨갱이 사냥’, ‘끼니를 위한 반공 전위역’, ‘복수를 위한 무자비한 테러’, ‘학살 전위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동기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서북청년단의 주요한 폭력 동기를 4가지 범주에서 파악한다. 즉,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동기, 군사적 차원의 동기, 정치적 차원의 동기, 그리고 세속적 차원의 동기가 서북청년단 폭력의 주요한 동기로 제시된다.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양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월남민 형성 요인을 재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서북청년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군정 실시에 따른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서북청년단의 결성 동기를 분석한다.

한편, 본 연구는 권력과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미군정과 초기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극우주의 정치운동은 보수주의 정치세력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민병대 역시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서북청년단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하면서 제주 4·3 사건에서 민병대

로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서북청년단의 폭력 행위가 이데올로기적 차원이나 군사적 차원보다 오히려 정치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의 동기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이 시기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북청년단의 행동강령과 폭력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차원이나 군사적 차원의 동기보다 정치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의 동기가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during the period of confusion after Liberation from Japan was a key actor in Korean politics and had influence on the Jeju 4·3 in both direct and indirect way. Some of the people who had experienc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under the Russian occupation and come south over the border organized the Young Men's Associations of 5 Provinces of North Korea. And after they were unified into the Northwest Youth, the Northwest Youth gained ground. The Young Men's Associations of 5 Provinces of North Korea and the Northwest Youth were called a 'Trouble-maker' or 'White Terrorist Group', came into the picture as a important actor in the politics in South Korea, and indulged in a terror against the left-wing in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anti-trusteeship.

Up to this time, the study on the Jeju 4·3 have been made analysis on the key motive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by the insurgent. However, the motive of violence of the army and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has been not discussed deeply. Especially, in respect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only a rough approach has been made and it is hard to find a full-scale study focussing the motive of the violence.

In the existing studies on the Young Men's Associations of 5 Provinces of North Korea and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the violence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are seen as the 'hunt for a Red', 'advance guard of anti-communist for earning a meal', 'merciless terror for revenge', 'advance guard for slaughter', etc. As the violence of the Northwest Youth have various aspects, it is difficult to explain about its motive in the same light. This study has the general idea of the key motives of violence of the Northwest Youth in four(4) kinds of categori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existing studies. Namely, the motives of ideological, military, political and earthly level have been suggested as the key motives of the violence of the Northwest Youth.

Before beginning the analysis on the motive of the violence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this study reexamines the main causes for the formation of people who came south over the border on the basis of existing studies and various kinds of basic data. This kind of work will be performe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members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In addition to this, an analysis will be made on the motive of formation of the Northwest Youth through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under the occupation of the U.S. Army.

In the meantim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power and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with focus o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by US Army and Lee, Seung-Man regime. In a sudden political change, the extreme political movement tends to connect with the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and the militia suppressing the uprising gets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power, too.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developed the political movement through extreme means with focus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played a role as militia in the April 3 incident, while gradually expanding its power.

In this study, I pointed out that the violent act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was more influenced by the motive of political and private level than by the ideological or military motives. The existing studies that dealt with these times in the past time have maintained a point of view that the violence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had been caused by the ideological and military level. However,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ode of conduct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 of Seobuk and the object of violence, I contend that the political and earthly motives was more decisive than the ideological or military motivation.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민병대(militia)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미국에서도 극우 민병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장봉기 또는 게릴라 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는 경찰과 군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기도 한다. 민병대는 반정부 테러활동을 전개하는 민병대, 반정부 무장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우익 또는 사설 민병대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민병대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부대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의 준군사 집단은 ‘순수한 군과 순수 외국인부대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해당되는 집단’으로 보인다(Alvarez 2006, 6). 특히 준군사 조직은 봉기를 진압하는 목적으로 군과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Kowaleski 1992, 7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병대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정부군과 경찰을 보조하며 학살 과정의 전위대로서 동원되는 집단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갖게 된다.(Alvarez 2006, 8). 즉, 협의의 민병대는 “반감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준군사적 의식(rituals)을 퍼뜨리고, 비공식적 사회 네트워크, 카리스마적 리더, 다양한 의식(consciousness)을 이용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Freilich & Pridemore 2005, 529).

민병대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폭력 행위자이다. 20세기 초 독일의 유명 인사들을 살해한 극우 민병대, 동티모르 독립과정에서 독립투표를 방해하고 UN 건물 방화와 UN 요원들 및 외국인에게 테러를 가한 인도네시아 계 민병대, 니카라과의 소모사 정권하의 소모사 민병대, 보스니아 사태의 세르비아 아르칸 민병대인 타이거(the Tiger), 르완다 제노사이드에서 후투족의 ‘인터아함웨(the Interahamwe)¹⁾,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서의 잔자위드(the Janjaweed)²⁾,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한 레바논 우익 민병대인 팔랑헤(Falange) 등의 민병대는 아시아, 아

- 1) 후투족의 준군사 조직(the paramilitary organization) 또는 민병대의 명칭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이들은 르완다 제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행위자이기도 하다.
- 2) 잔자위드는 수단 아랍정권이 내전상황 속에서 다르푸르의 민중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난민에게 무자비한 학살과 폭력을 가했고, 점차 이들은 군과 경찰로 흡수되었다.

프리카, 유럽, 중남미에서 대량학살과 집단폭력을 수행하였다.

알바레즈(Alex Alvarez 2006)는 민병대의 특징을 4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민병대의 특징은 첫째, 현대의 군 조직이 엄격한 계선조직을 따라 형성되는 반면, 민병대는 느슨한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민병대는 권위 또는 명령 서열이 분명하지 않으며 유연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민병대는 그 충원을 주로 역할과 계급에 따르기보다 개인적 특징과 개인적 관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민병대의 구성원은 유동적이고 동적인 사회적 배열을 많이 보인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서 잔자위드의 구성은 광신당원, 전역한 군인, 강도단, 범법자, 실업자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Prunier 2007). 콜롬비아의 AUC 민병대는 대토지 농장주, 마약거래업자, 미국 석유기업이 고용한 콜롬비아 북부의 토착 과라과이 계 부족에서부터 요리사, 운전기사, 컴퓨터 기술자 등 다양한 사회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³⁾ 또한 군과 경찰이 지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병대는 리더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군 조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민병대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민병대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훈련받을 수도 있지만, 정규군의 특징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민병대는 군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위에 따라 행동하지만, 민병대와 국가의 연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모호한 연계에도 불구하고 민병대는 권력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는 보안군과 내무부장관 등을 통해 아르칸 민병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켰으며 자금과 군사물자를 제공하였다. 넷째, 민병대는 종종 개인적 이득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민병대들은 폭력을 자행하는 동안 귀중품을 탈취하거나 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이러한 민병대의 활동이 방어적 성격을 넘어 대량학살과 인종학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발생할 당시 많은 학살에 앞장선 극우 후투족 군사조직인 「인터아함웨」와 아프리카 수단의 「잔자위드」이다.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를 연구한 프루니어(2007)는 잔자위드 충원의 사회적 기원 면에서 잔자위드가 ①강도단과 교역물 약탈자, ②동원 해제된 정규군 출신의 군인들, ③국경지대에서 다른 부족들과 경작지 문제로 다투던 아랍 소수부족 청년들, ④사면을 받기 위해 가입한 일반 범법자들, ⑤타잠무 알-아라비 당의 광신 당원들, ⑥무직 아랍 청년들이라는 6가지 사회적 기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수단의 대통

0) Washingtonpost, May 22, 2007.

령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원을 해산시켰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다르푸르 사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황이 잔자위드가 활개 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Prunier 2007, 98-99). 이들은 다르푸르 민중봉기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다르푸르에 급파되었고 스스로 ‘국경방첩대’, ‘제2정찰대’, 또는 심지어 ‘공포의 기습부대’를 칭하고 다녔으며, 정규군의 군복과 계급장을 착용하고 정부군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등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아랍 민병대원들은 사람들을 구타하고 재산을 약탈했으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 그리고 잔자위드는 여성들을 겁탈하고 때로는 달구어진 쇠로 상처를 내거나 표식을 하였다. 일부 남자 어린이들과 성인 남성들은 끌려가 팔려졌고 소녀와 여성들이 유괴되었다. 도망치는 여성들은 노상에서 납치되거나 겁탈 또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민병대들은 난민캠프를 습격하여, 약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국가에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하는 준군사 조직(paramilitary group)인 민병대의 폭력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양태에 영향을 미친 민병대의 폭력 동기도 다양하다. 민병대의 폭력은 민병대가 출현한 국가 또는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폭력 동기도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북청년단은 ‘행동적 반공단체’로 간주되어 왔다(김점곤 1974, 146). 최근의 제주 4·3 사건 연구에서 서북청년단은 ‘반공 월남민’, ‘백색 테러단’, ‘반공의 전위대’, ‘학살의 전위대’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북에서 공산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월남민들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을 피해자로 평가하고 있다(정종식 2007).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박탈당한 집단(박명립 1988 ; 양정심 2008),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비호를 받은 좌파 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양정심 2008)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북청년단 출신들 역시 자신들은 ‘권력에 이용당한 희생양’ 또는 ‘철저한 극우’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서북청년단은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전통적으로 서북청년단 폭력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의 발현으로 그 원인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지적되어져 왔으며, 일부 연구자는 이들의 폭력 동기가 식량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명립 1988). 그러나 서북청년단은 식량난이 실업과 식량난이 해결된 상황에서도 제주도에 경찰과 군으로 입도하였으며, 이들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이처럼 서북청년단의 행위 동기는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제주 4·3 사건의 가해자 집단에 대한 진실규명의 사각지대를 조명함으로써 4·3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서북청년단 폭력행위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 ‘반공’ 이외에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다른 동기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반공주의나 식량난의 해결, 군사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동기가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려 한다.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서북청년단의 결성과 폭력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서북청년단과 해외 민병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민병대로서의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서북청년단에 대한 연구와 제주 4·3 사건 연구에서 서북청년단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검토하며, 민병대에 대한 해외 연구들을 고찰하여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병대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미군정 시기의 청년단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오유석(1988)의 우익청년단체들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필두로 하여 해방 공간 좌익과 우익의 청년단체의 조직과 형성을 다룬 류상영(1989)의 연구, 조선민족청년단을 다룬 연구들(안상정 1991 ; 임종명 1994), 미군정기 우익청년단체의 성장과 분화 과정을 다룬 김진형(1995)의 연구와 김현주(2000)의 연구들이 초기의 연구흐름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준군사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대동청년단에 대한 김수자(1999)의 연구와 반공의 전위대로서 서북청년단을 다룬 정종식(2007)의 연구가 있다. 본 논문은 임대식(1999)의 연구, 정종식(2007)의 연구, 그리고 존 메릴(1980)과 박명립(1988)의 연구에서 나타는 서북청년단에 대한 폭력 요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존 메릴(1980)은 3.1 사건 이후 경찰과 ‘엄청난 숫자의 극우 서북청년단’의 강화조치에 대해 미군정의 의도, 즉 탄압 의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소한의 제약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유사 경찰조직’인 서북청년단은 경찰과 더불어 뇌물수수, 공갈, 사기 등을 일삼았고, 2월 총파업 이후 경찰과 더불어 공산주의 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체포를 강화했다. 이러한 폭력의 요인으로 존 메릴은 서북청년단을 ‘월남한 반공피난민’으로 ‘복수를 위해 무자비한 테러로 남로당과 싸웠다’고 서술하며, 반공 피난민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존 메릴 1980, 31). 박명립(1988)도 존 메릴의 연구처럼 서북청년단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서북청년단을 ‘북한의 사회개혁시 일제치하에서 누려오던 사회적·경제적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월남한’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박명립 1988, 64). 그리고 그는 서북청년단을 ‘끼니를 위해 반공전위역’이라는 청부테러단으로 인식하는 등 서북청년단의 결성을 사회적 경제적 박탈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테러를 일으킨 소극적 성격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대식(1999)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외인부대’로서 서북청년단을 제주도에 서 ‘빨갱이 사냥’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이 경찰전투대와 서청대대로 제주도에 파견된 것을 서북청년단에게 빨갱이 사냥의 합법성 부여로 평가하고 있다(임대식 1999, 234). 그에 따르면, 서북청년단의 활동은 공식·비공식 조사 기관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대동청년단과 함께 4.28 평화회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라리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임대식은 제주 4·3 사건을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서로 다른 노선의 충돌로 바라보고 있다. 즉, 서북지역은 일제시대 근대화가 진행되었으며, 기독교와 천도교가 전파되어 미국 유학생 배출 등 우파 민족주의의 메카였고, 제주도는 좌파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했다는 점으로 인해 제주 4·3 사건은 양 세력의 노선충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북청년단의 잔혹행위의 근원을 분단-냉전-전쟁의 갈등 심화과정에서 이북에서의 피해로 인한 피해의식의 극단화로 바라보고 있으며 서북청년단을 미군정과 극우세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조직과 활동을 연구한 정종식(2007)은 이북의 공산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반공세력이 이북청년단체를 결성했으며, 이러한 단체들이 서북청년단로 통합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종식은 1945년 말부터 이북5도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단체들이 백색테러 활동을 전개한 이후 1946년 말 서북청년단으로 통합되었

으며 미군정과 우익세력과의 후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을 위해 이북지역의 첩보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군으로 충원되어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종식은 서북청년단이 ‘반공’이라는 명분하에 좌익 소탕과 무고한 양민에 대한 가해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련군정 하에서 사상 탄압, 토지개혁, 친일청산 등 일련의 공산화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월남하여 우익세력에 이용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내연구들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 요인으로 이북에서 나타난 사상 탄압, 토지개혁과 친일청산 등의 공산화 과정으로 인한 피해(존 메릴 1980 ; 정종식 2007),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기득권의 박탈과 식량난(박명림 1988) 또는 피해의식(임대식 1999)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연구에서는 서북청년단을 빨갱이 사냥을 위한 ‘외인부대’로서 또 다른 ‘권력 희생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병대 또는 준군사조직에 대한 해외 연구들은 크게 민병대 출현과 폭력의 원인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 경제적 원인을 강조하는 연구들(Falk & Zweimüller 2005 ; Freilich & Pridemore 2005 ; Dyer 1997)은 민병대의 결성과 극단적 폭력의 원인으로 실업, 농업경제의 침체에 따른 토지상실, 식량부족 등을 제시한다. 팔크와 즈바이뮐러(Falk & Zweimüller 2005)는 폭력과 실업의 관계를 검증하며, 과거 서독과 동독에서 나타난 우익의 극단적 범죄가 실업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프라이리히와 프라이드모어(Freilich & Pridemore 2005)는 농업실업자가 많을수록 우익 민병대가 출현한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이어(Dyer 1997)는 1980년대 말 미국 내 민병대의 출현을 농업경제의 침체에서 찾고 있다. 다이어는 국제 곡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미국의 이자율 인상 정책으로 인해 토지를 상실하게 된 농민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 사망하거나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일부 농민이 자신들의 토지 상실의 원인을 미국 금융을 움직이는 유대인 집단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유대적인 민병대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Lipset & Raab 1970 ; Blalock 1967 ; Tolnay & Beck 1995)은 민병대와 그 폭력의 원인을 타 집단의 지위 향상과 성장, 그리고 현상유지를 지적한다. 립셋(1981)은 폭력을 수반한 극단주의가 정치운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주의 운동, 즉 극좌적 정치 운동, 중도적 정치운동, 극우적 정치운동은 각기 다른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산업화가 미약한 국가에서 보수주의와 결합되어 극우주의 정치운동이 출현한다. 이런 관점에서 립셋과 라압(Lipset & Raab)은 극우주의 운동이 출현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은 우익집단의 정치운동으로 발전되는 원인인 분노는 권력과 지위 박탈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Lipset & Raab 1970). 즉, 사회·경제적 특권 집단이 사회 변화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정치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소수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집단이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연구들(Blalock 1967 ; Tolnay & Beck 1995)이 있다. 톨네이와 벡(Tolnay & Beck 1995)은 1882-1930년 사이 미국 남부에서 흑인 농업노동자, 흑인 소작인, 자작농에 대한 인민재판, 교수형 등 사적 처벌이 나타난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은 노예해방으로 인해 흑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남부 면화 지대로의 이민 증가와 백인 소작인과의 경쟁, 그리고 면화 시장의 침체가 백인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나타나 흑인들에 대한 사적 폭력이 출현했음을 주장하고 있다(Tolnay & Beck 1995).

험프레이즈와 바인스타인(Humphreys & Weinstein 2008)은 CDF(Civil Defence Forces) 민병대 동원의 결정요인이 현상유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에라이온 CDF 민병대 참가 동기는 무장봉기 집단의 동기와 거의 유사하지만, CDF 민병대 참가자들이 물질적 동기가 더 많으며, CDF 민병대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적 관계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가설과 일치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Humphreys & Weinstein 2008, 450-451).

사회적 요인으로 소수자들의 문화적 지위 향상, 근본주의적 종교 등이 강조된다(Gibson 1994 ; Freilich & Pridemore 2005). 김슨(Gibson 1994)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로 미국 백인 남성에게 불안정감을 가져왔으며, 이후 다양한 미국의 사회 운동으로 인한 미국의 문화 변화가 백인 남성에게 사회에 대한 분노,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여론과 사회운동 및 여성과 소수자들의 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백인 남성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리히와 프라이드모어(2005)는 민병대가 근본주의적 종교와 소수자들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 출현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한다.

민병대가 무장봉기 진압작전에 동원되는 경우, 민병대의 조직 구조, 이데올로기, 진압작전의 전략 등이 민병대의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파일리치

(Feilich et al 1999)는 민병대의 특정 이데올로기와 조직 구조가 정치 범죄와 테러 등 일탈 행위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가 일탈행위를 합리화하며, 조직화 구조로 인해 민병대 구성원들의 행위가 통제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닌(Sanín 2008)은 콜롬비아의 게릴라와 민병대의 행위 차이를 설명하면서, 무장집단의 서로 다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화 장치, 경제적 보상, 그리고 진압작전의 전략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특별한 조직화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강화된 집단은 제노사이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정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민병대에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 민간인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 보상의 역할과 역효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재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적인 경제적 인센티브와 조직화 과정이 민병대에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콜롬비아 민병대가 투입되고 나서 살인적인 응징 군으로 활동한 이후 선택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는 민간인에 대한 준군사기구의 행위는 집단의 자질보다는 전략적 요소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익청년단체와 민병대 등의 폭력 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을 참조한다면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서북청년단의 폭력 요인은 이데올로기에 있을 것이다. 공산화로 인한 피해로 인해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였으며, 이는 서북청년단의 폭력과 연계되었을 것이다.

둘째,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군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제주 4·3 무장봉기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셋째, 서북청년단은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실에 처했다. 이에 따라 보수주의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 극단적인 정치운동과 폭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상유지의 동기를 꺾하려 했을 것이다.

넷째, 실업과 식량난이 서북청년단 충원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충원된 서북청년단원들은 실업과 식량난 요인으로 인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을 것이다.

서북청년단의 행위동기에 대한 네 개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제2장은 월남민 형성의 주요한 요인과 서북청년단의 결성 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제3장은 서북청년단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은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무장봉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있어 서북청년단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은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를 이데올로기적 동기, 군사적 차원의 동기, 정치적 차원의 동기, 세속적 차원의 동기 등 4가지 차원의 가설들을 검토하고 이 동기들 중 정치적 차원의 동기와 세속적 차원의 동기가 주요 행위 요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 서북청년단 결성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을 거치면서 4강대국은 신탁통치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알타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선(先) 군사점령과 후(後) 신탁통치에 합의하였다. 포츠담 회담을 앞두고 전까지 트루먼 행정부는 ‘신탁통치는 한국에서 소련의 지배를 방지할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였지만, 원자폭탄의 개발 성공은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포츠담 회담에서 국무성 및 육군성 관리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련과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트루먼은 “소련과의 합의는 필요없다”는 번즈의 주장을 수용하였다(이동현 1989, 36).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조선은 급속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원자폭탄을 통해 일본을 조기에 항복시키고 소련의 대일진 참전을 봉쇄할 수 있었다(머트레이 1989, 59). 한편 미국의 맨하탄 계획에 따른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소련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련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며 협력하고자 하였다(Vladislav Zubok & Constatine Pleshakov 1996, 36-77).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남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면, 해방 후 귀환인구와 이북의 월남인구의 급증은 경제적·사회적 불안, 중국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었다. 김두섭(1999)의 연구에 따르면, 귀환 동포의 인구이동은 해방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나 연고지역에 정착하였다. 중국, 하와이

등 태평양 지역에서 유입된 귀환인구의 이동은 1946년 말에 거의 완료되었지만, 이 북지역의 월남과 만주로부터의 귀환은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표 2-1> 인구이동, 남한 1945년 10월 15일-1947년 11월 29일

국 적	누적합계	
	출국	입국
일본인(군인)	179,273	
일본인(민간인)	704,195	
중국인	1,940	
대 만	103	
기 타	274	
38선 이북 일본인		288,497
38선 이북 한국인		855,870
한국인(일본출발)		1,110,544
한국인(중국출발)		58,143
한국인(태평양 지역)		37,079
합계	885,785	2,350,133

자료 : GHQ/SCAP records, G III, Box no. 381 ; RG 331, South Korea, General Oct. 1945-Nov. 1947/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no.775009,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이후 남한 사회의 인구이동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에서 온 귀환자와 이북지역의 월남인이 많다는 점이다. 귀환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의 경우, 남자는 25-29세의 연령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20-44세의 청장년층에 집중되었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단독이동을 보였고, 여성은 가족을 동반한 형태를 보였다. 남성단독 귀환은 일본에서 귀환한 집단에서 두드러지며,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월남인의 경우 가족동반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후 일어난 인구이동의 특성에 따라 남한사회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해방 후부터 1948년까지 월남민들에 대한 통계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월남민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다.¹⁾ 북한지역의 소련 민정국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48년 8월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간 사람 수는 84,369명(1946년 - 44,175명, 1947년 - 30,471명, 1948년 - 8개월 9,723명)으로 집계되었다.²⁾ 하지

1) 조선은행 조사부가 1948년에 조사한 월남인은 1946년에 185,441명, 그리고 1947년에는 165,074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위 미군정의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감』(1948)을 참조.

2) 기광서, ‘친일파 처리, 그 배제와 수용의 메커니즘’(재인용).

<http://www.koreanhistory.org/webzine/read.php?pid=6&id=79>(검색일:2008년 11월 16일)

만 실제 월남인의 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이다. <표 2-2>에 알 수 있듯이 미군정이 집계한 그 수는 1946년에 18.5만 명, 1947년에 16.3만 명, 48년 8월까지 8.6만 명이 었다. 월남민들이 남한에 친족 등 연고자가 있거나 다양한 경로로 남한으로 이동했 기 때문에 미군정도 통계과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41.4만 명보다 많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상준(1994)은 월남인의 수(1945년 10월 - 1948년 8월)를 62.2 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명선(1983)은 1945년~1949년까지의 월남민 인구를 60-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 성별 면에서 월남인 중에는 남성이 여성 보다 많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는 120이었다(Kwon 1977, 191 ; 이명선 1983, 40).

<표 2-2> 38선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난민이동(1946년 1월-1948년 8월)

단위:명

기간	1946년	1947년	1948년
1월	13,306	706	2,664
2월	20,437	186	4,005
3월	34,670	8,096	11,855
4월	50,450	31,871	15,848
5월	25,818	36,825	12,391
6월	17,203	13,672	15,471
7월	8,212	13,672	17,295
8월	4,739	10,589	6,505
9월	2,234	10,472	
10월	2,997	9,661	
11월	4,740	7,715	
12월	635	4,487	
총합	185,441	163,235*	86,036

4개 난민 캠프 기록 : 춘천, 주문진, 의정부, 개성.

자료 : *Office Foreign Affairs*. ; GHQ/SCAP records, G III, Box no. 381; RG 331, South Korea, General Oct. 1945-Nov. 1947/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no.775009;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South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4, July-August 1948, Part I, Section 1, Table 1.

*조선은행(1948)은 1947년, 165,07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월남 동기는 대체적으로 사상적·정치적 이유, 농지개혁 등 재산몰수, 종교탄압,

학업, 취업, 기타 등으로 지적되어 왔다(조형·박명선, 1985 ; 강정구, 1992). 이동원 외(1997)의 연구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월남 동기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월남 당시 20대 월남인들은 정치 사상적 탄압의 비중이 높았고, 30대의 경우에는 재산 몰수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월남 동기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사상적 탄압’의 비중이 높았고, 국졸 미만인 경우, 재산 몰수가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귀옥(2002)은 조형·박명선(1985)의 연구가 1946년 이북의 ‘민주개혁’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월남 시기와 출신 계급, 계층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귀옥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남인³⁾ 정착촌을 중심으로 월남민의 경험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질적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다. 김귀옥은 전쟁 전 월남민의 경우, 1945년에서 1946년 초에는 귀향으로서의 월남의 비중이 높으며, 1946년 3월 이후 몇 달은 재산 몰수에 따른 월남 비중이, 그리고 1947년 이후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에 의한 월남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해방 후 월남인들의 월남동기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계량적 연구들에서 나타는 월남 동기는 전후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월남 동기를 일률적으로 정치·사상적 탄압, 재산몰수, 종교탄압 등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질적 방법론을 취하는 김귀옥의 연구는 특정 월남민 정착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월남민의 월남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전쟁 이전의 월남 동기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작적 행위와 계량화 작업은 척도의 타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상의 논리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장원석 1991, 449).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월남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해방 후 이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탐색하며, 질적 방법을 수용하는 등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월남민의 월남 동기를 파악하여 서북청년단 결성에 미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1절 월남민 형성 요인

3) 김귀옥은 시기적으로 해방 후부터 전쟁 후까지 월남한 월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남민의 형성 요인과 서북청년단의 결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방 후 소련군정의 점령정책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소련군정의 점령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스탈린의 지령, 그리고 소련 정책 결정 집단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소련군정에 북조선 점령정책에 대한 7개 항목을 타전함으로써 점령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마련되었다. 이 소련의 점령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북조선 영토 내에 소비에트 및 그 밖의 소비에트정권의 기관을 수립하지 않고, 또한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않을 것”, 둘째, “북조선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가 광범위한 연합에 기초를 둔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 셋째, “이 점에 관하여 적군이 점령한 조선 각 지역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단체, 정당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활동을 원조할 것” 등을 담고 있다.⁴⁾

1945년 12월 1일, 소련 외무성의 말리크(Malik)는 “소련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기란 정치적으로 불편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6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⁵⁾

첫째,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하고 재천명할 것.

둘째,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의 모든 사회, 정치 조직이 참여하는 정부를 수립할 것.

셋째, 제 조직은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넷째, 제헌의회는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 지역,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교사, 피고용인과 기타 집단의 폭넓은 민주적 회의를 거쳐야 하며, 제헌의회에 대표자와 통일정부의 관료를 내세울 것.

다섯째, 이런 사전작업을 위해 소련과 미국(가능한 중국과 영국 대표부를 포함하여)의 특별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소련과 미국의 군대가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4)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선인, p.60(재인용).

5) Jacob Malik, “On the Question of a Single Government for Korea,” 10 December 1945, AVP RF, Fond 0102, Opis 1, Delo 15, Papka1, 1. pp.18-21. ; Weathersby, K., 1993,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odrow Wil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No. 8, p.19(재인용).

즉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련과 미국의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특별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와 동시에 1945년 12월, 소련 외무성 제2극동부(the Foreign Ministry's 2nd Far Eastern Department)의 자브로딘(Zabrodin) 차관은 '한국의 통일임시정부의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당과 집단의 다양성, 내부의 통일성 결여, 그리고 미국의 권유 때문에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이런 특성이 한국의 대내외의 정책에 있어 임시정부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가능한 2가지 방식을 고려하면서 친일파를 배제하고 보통, 비밀, 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민의회가 한국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방식이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려된 "소련, 미국 그리고 중국의 합의에 기초한 정부 수립"방식이 "공산정부 도입과 민주적 요소가 반동인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구하려 할 것"이라며 첫 번째 방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⁶⁾ 그리고 모스크바 회의를 앞두고 '한국통일 회복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소련당국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정책이 "일본 침략자들의 군사 능력의 파괴, 한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제거, 그리고 한국 인민의 민주주의 운동 고취와 독립을 위한 준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모스크바 회담을 앞두고 소련당국은 일본의 부흥 가능성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소련이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일본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에서 친일청산 등의 반일본적인 정책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 회의에 앞서 한반도의 통일 방법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련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행정을 조직 운영하였다. 따라서 1945년 9월 소련 지도자의 지시와 소련 외무성의 정책구상은 인민위원회와 공산당의 부상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을 암시하고 있었다.

1) 정치적 원인

해방 후 한반도에는 일본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안대, 치안대, 자치위원회

6) Zabrodin, "The Question of a Single Provisional Government for Korea," December 1945, AVP RF, Fond 0102, Opis 1, Delo 15, Papka 1, 1. pp.11-17. ; Weathersby, K., 1993, pp.18-19(재인용).

등 자연발생적인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중앙에서도 정치 구심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북지역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결은 이루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지역은 소련의 진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북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 지방의 좌우 균형적 정치지형에 따라 자치조직들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북지역은 전반적으로 좌파가 우세한 방향으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련군정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중앙으로 결집할 중앙조직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5도행정국을 발족하였다. 북조선5도행정국은 공산당 4명, 조선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느슨한 연합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북조선5도행정국의 정치적 구성은 조선민주당에 불리한 형세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였으며, 여성이 13.1%를 차지하였다. 각 정당별로 구성을 보면, 북조선공산당이 1,102명, 조선민주당이 351명, 청우당이 253명이었으며, 절반 이상인 1,753명이 무소속이었다(Armstrong 2004, 114). 많은 투표 참여에도 불구하고, 선거 수행과정에서 마을 수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민중을 강하게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쉽지 않음과 북조선공산당이 아직까지 완전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Armstrong 2004, 114-115). 이를 반영하듯, 1948년 3월 북조선공산당의 당원 수는 9백만 인구 중 8%를 차지하였다.

<표 2-3> 북조선공산당원의 수

	1946년 8월	1948년 3월
노동자	73,000(14.7%)	143,000(21%)
빈농	105,000(35.0%)	374,000(52%)
전체당원	366,000	700,000

출처 : Armstrong, Charles K., 2004,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p.110.

해방 후 소련의 점령 초기, 이북지역의 정당은 산업이 발달한 도지지역과 농촌지역에 기반하는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의 청우당이 공산당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인민위원회와 각 사회조직들을 흡수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을 당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북지역에서 당

은 노동자와 농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후 북조선통일전선 결성을 위한 선거결과는 이북지역 전체 민중에게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공산당이 뚜렷하게 성장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군은 점령 초기 부녀자에 대한 강간과 탈취 등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였지만, 1946년 2월 헌병의 투입으로 그러한 행위는 감소되었다.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 소련군은 소련점령 초기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평양 고무공장의 기계와 10월 수풍발전소 발전기 탈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만신과 소련군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군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폴리조사반을 파견하였으며, 소련군의 기계탈취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기계를 파괴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기계를 수거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조선민주당의 오해는 이후 반탁문제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45년 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조만식을 중심으로 45년 8월 17일 조직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반탁운동과 통일정부수립을 표방하면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46년 1월 1일 평강초등학교에서 신탁반대결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모스크바 결정 이후 이북지역에서 반탁시위가 일어났다. 소련당국은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조만식⁷⁾을 설득하고자 하였지만, 1월 5일 소련군정과 조만식의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소련군정이 반탁 운동자들을 체포하자, 반탁운동을 전개하던 일부는 체포를 피해 월남하였고,⁸⁾ 일부 반탁 지지자들은 이후 이북지역에 공산당에 적대적인 조직적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물리적 해결을 지향하였다. 46년 3월 1일 김태양(金太陽) 등 31명이 송화삼일동지회를 결성하였고,⁹⁾ 황탁(黃濯)과 최석주(崔錫周)는 46년 5월 조만식 구출과 폭동의거를 모의하였다.¹⁰⁾ 동년 8월 22일에는 김성순(金聖淳), 조동, 백유철 등이 신의주우리청년회를 결성하고, <우리청년>이라는 기관지를 만들어 공산당을 규탄하다 신의주학생사건 이후 피살되거나 체포되었다.¹¹⁾ 이북지역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은 이후 서북청년단과 관련되었다.

이북지역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친일청산은 중요한 정치 의제였다. 해방 직후 10

7) 조만식과 창당세력인 백민수, 유재기 등은 식민시기부터 '기독교 사회주의'임을 자칭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권진관, "1920-30년대 급진주의 시대에 있어서 민중과 교회", 김홍수 엮음,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와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61, pp.279-311. 참조.

8) 중앙일보, 1970년 8월 17일자.

9)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 p.927.

10) 북한연구소, 1994, 위의 책, p.927. 그러나 이들은 12월 2일 보안대원의 습격으로 체포되었다.

11) 북한연구소, 1994, 위의 책, p.928.

월에 건국동맹, 국민당,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의 정당통합운동에서도 친일파를 배제하기로 논의하였으며, 한국독립당도 환국 전에 친일파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친일파의 재산 몰수 및 국유화 등을 강령으로 결정하였다.¹²⁾

초기 부분적인 친일숙청은 45년 말부터 자발적 형태를 띤 인민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9월 고성에서 민족반역자(일본인, 조선인 포함) 11명에 대한 인민재판으로 사형연도가 내려졌으며, 상양에서도 민족반역자 3명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5년과 3년의 교화형을 내렸다.¹³⁾ 월남하여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한 박 모씨의 사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박○○은 손을 끊어 혈서를 쓰고 일본 군대에 지원해 대위까지 했다. 해방 후 김일성 정치가 되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해서 붙잡아 반성할 때까지 때렸다. 그 후 그는 이남으로 도망하여 서청으로 맹활약했다.¹⁴⁾

면장은 주로 한국인이 하지만 교장이나 지서장은 일본인이 주로 하였다. 순사 부장이나 순사 앞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했다. 우리 면 형사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옆의 신포읍 순사는 악명이 높았다. 일정 때 내가 한 번은 신포 친구집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흠이 잔뜩 묻은 긴 장화를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오는 형사 부장을 보았다. 동네 청년들은 어떤 트집이 잡혀 곤혹을 치를까봐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 해방이 되고 난 후 그의 아들이 '자살하라'고 권유하자 그는 '내가 왜 죽어', '일본은 절대로 안 망한다' 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마을 청년들한테 붙잡혀 등에 '내가 정○렬이요' 하는 글을 붙이고는 집집을 돌며 사과했고 결국은 맞아 죽었다.¹⁵⁾

사적 친일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적 처형이 발생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 청년들이 '치안위원회' 또는 '청년치안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 치안대는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인의 안전 귀국을 보장하며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였다.¹⁶⁾ 그러나 친일파 청산은 공식적인 정식재판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반민자 죄상기'의 기록은 이북지역에서 친일정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친일청산의 온건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척으로부터 일본으로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여 체포한 방의석은 중추원참의로

12) 이강수, 2003, “해방 직후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논의 연구”, 전남사학, 제20집, pp.26-27. ; 해방일보, 1945년 10월 3일자.

13) 이강수, 2003, 앞의 논문, p.43(재인용).

14) 이두호의 구술, 김귀옥, 2002,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p.51(재인용).

15) 박영천의 구술, 김귀옥, 2002, 위의 책, pp.192-193(재인용).

16) 김귀옥, 2002, 위의 책, p.193.

씨 또한 함남 함흥에서 북선교통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이 되어 '교통보국'을 열렬히 부르짖고, 북조선의 중요광산을 점유하고 조선에서 제일가는 채굴량으로 상을 받아 대동아전쟁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실한 황국신민으로써 젊은 청년들을 학병이라는 명목 하에 죽음터로 내몰고 "조선국민은 하루 바빠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갱생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오던 자로 이북에서 친일과 숙청에 의하여 15년 징역 언도를 받고 도피하여 월남한 자라 한다.¹⁷⁾

소련군정의 이북지역 정책방향에서 드러나듯이, 소련군정의 친일청산은 이북지역에서 핵심사항이었다. 이북에서 친일파 규정이 등장한 것은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확대위원회에서 채택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서'였다. 이 결정서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관공리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인근 주민 및 소작인으로서 그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소유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1946년 9월 5일 발표된 '북조선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서 친일파는 선거권이 박탈되었다. 1946년 11월 3일 선거에서 575명이 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의 범위를 도 책임자(책임관) 이상으로 규정하였다.¹⁸⁾ 이 범위는 1947년 7월 북조선노동당의 친일파 규정이 주임관(군수) 이상으로 확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친일청산은 토지개혁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946년 2월, 토지개혁을 준비하는 과정, 즉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을 결정한 각도와 군의 인민위원회대표들, 정당 및 각 사회단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토지개혁문제를 다루면서 친일파 숙청에 대해 '친일분자 및 반민주적 반동세력을 철저히 숙청'한다며 친일파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⁹⁾

이북에서의 친일청산은 해방 후부터 부분적으로 자발적 과정을 노정하였으며, 토지개혁 실시와 함께 실질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주계층, 기업가, 친일부역자들, 그리고 친일청산에 위협을 느낀 일본군 자원병 출신들이 월남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인민위원회와 북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은 농민, 노동자가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정치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소련군정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의 성장, 이를 토대로 빈농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장, 그리고 이들의 친일청산과정은 전통적인 지배집단에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민주당 세력 역시 지지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았다.

17)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반민자죄상기』 '일제의 공로로 벼슬하던 林昌洙 參議와 그 일행들'

18) 이강수, 2003, 앞의 논문, p.41.

19) 김준화 외, 1969, 『북한연구자료집 1』 (서울: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pp.46-47.

2) 경제적 원인

1942년을 기준으로 이북지역(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 한반도 전체 경작지의 34.1%가 분포되어 있었다.²⁰⁾ 그리고 북에는 밭 면적이 1,556.9만 정보로 443.5만 정보의 논보다 월등히 많아서 북은 밭농사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이북의 경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50.1%였고 농지가 없는 농가가 24.2%로 남한에 비해 낮았다. 특히 북한 지역의 경우, 논이 밭보다 자작지의 비율이 낮아 논의 64.7%가 소작지였다. 1943년의 경우, 지주 소유의 토지 면적은 115만 4,838정보로 전체의 58.2%였으며, 지주소유의 논 면적은 72.2%, 밭은 53.8%였다(고현욱 1991, 128). 이런 토지 상황으로 인해 이북지역에서 식량문제 해결과 더불어 소작제도의 혁파와 토지개혁이 시급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

<표 2-4> 자·소작의 구성(1942년)

단위: 농가:1,000호, 경지:1,000정보

	농가				전경지		논		밭	
	자작	자작겸 소작	소작	비용자	자작지	소작지	자작지	소작지	자작지	소작지
전체	529.7 (17.7)	729.4 (24.3)	1,641.7 (54.8)	95.8 (3.2)	1,865.7 (41.7)	2,609.6 (58.3)	567.3 (32.1)	1,200 (67.9)	1,298.4 (47.9)	1,409.6 (52.1)
남	298.1 (13.9)	536.0 (24.9)	1,229.8 (57.3)	83.9 (3.9)	929.0 (37.6)	1,544.9 (62.4)	410.6 (31.0)	912.2 (69.0)	518.4 (45.0)	632.7 (55.0)
북	231.6 (27.3)	193.4 (22.8)	411.9 (22.8)	12.0 (1.4)	936.7 (53.2)	1,064.7 (53.2)	156.7 (35.3)	287.8 (64.7)	780.0 (50.0)	776.9 (50.0)

화전농과 화전은 제외한 통계치임.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2; 나민수, 1996, “남북한의 농업정책 비교”, 『산업연구』, 제7호, p.3(제인용).

이북지역에서는 1946년 3월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이전, 1945년 말부터 부분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다.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이 합의하여 일본인 농지와 친일파 재산 농지에 대한 몰수와 몰수된 농지의 국가 소유, 그리고 농민에 대한 무상분배를 실시하였다(김성보 1995, 61). 그리고 강원도 등지에서는 이미 소작료 3·7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소련군이 이북지역에 진주하면서 함경북도 지방에서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몰수가 시작되었다.

20) 나민수, 1996, “남북한의 농업정책 비교.” 『산업연구』 제7호, p.2.

1945년 가을부터 소작료 3·7제 실시와 부분적인 토지개혁을 진행한 이후, 1946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농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애초 일본인, 친일자의 토지에 대한 몰수, 조선인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와 반분소작제 철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기조로 하던 초기의 토지개혁방향은 소련정부 내 국방성과 외무성의 의견 절충 과정을 거치면서 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관한법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김성보 1995, 70-83). 이 법령은 ①일제 및 일본인의 토지, ②친일자의 토지, ③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 ④전부 소작 주는 자의 토지, ⑤계속 소작 주는 자의 토지, ⑥5정보 이상 소유한 성당, 사찰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였다. 이북의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토지현황은 <표 2-5>처럼 지주의 토지 몰수가 전체 몰수 토지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반역자 및 도망자의 몰수 토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2-5>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몰수현황

몰 수 토 지			
대 상	면적(정보)	비율(%)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지	112,623	11.3	
민족반역자 및 도망자의 토지	13,272	1.3	
5정보이상 지주의 토지	237,746	23.8	
전부 소작주는 자의 토지	263,436	26.3	
계속 소작주는 자의 토지	258,053	35.8	
성당, 사원, 종교단체의 토지	15,195	1.5	
합 계	1,000,325	100.0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1946-1960)』(평양: 국립출판사, 1961), p.59. ;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 1988, 『북한의 경제』, 광주:도서출판 광주, p.51(제인용)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 북한 지역의 농업호수(1946년 말 기준)는 1,121,295호이며, 총 경지는 논 387,980 정보, 전 1,436,625 정보였으며, 1호당 평균 1.63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다(김성보 1995, 84). 김성보(1995)는 토지개혁 이후 표준 농가는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식량의 자가 조달이 가능해졌고, 생산협작사의 부업활동을 통해 부가적인 이윤추구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농가는 중농의 형태

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북의 토지개혁 이후 농업의 사유화 비율은 1949년에 96.8%를 나타내었으며, 전후 1953년에도 68.0%의 비율을 유지하였다.²¹⁾ 한 농민이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는 토지개혁이 이북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금번 토지개혁령을 발표하시어 오랜 동안 질곡 속에서 갈망하던 우리들의 토지문제를 해결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장군님의 영웅적 법안에 대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만족을 가집니다. …… 주저 말고서 때때로 명령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추해도 주저 않고,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²²⁾

이러한 가운데 소련당국은 농민들로부터 성출을 받은 후 도시민에게 배급하는 양곡의 성출(誠出)과 배급제를 중심으로 식량정책을 전개하였다(김성보 1993, 865). 이 성출-배급 정책은 45년 말부터 시작된 소작료 3·7제와 더불어 시행되었는데, 농민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정책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 배급은 도시민 중 적산 기업체 노동자, 관공서 사무원 및 소련 주둔군과 일본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들은 자유 시장²³⁾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다(김성보 1993, 866). 소련당국의 성출하는 과정에서 양곡을 공정가격으로 곡물 값을 지불하였지만,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에 농민들은 높은 시장가격으로 곡물을 팔고, 그 수입으로 다른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민지 식량통제의 해체와 더불어 곡물유통의 시장화에 따른 매점매석, 그리고 전반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1945년 8월과 9월 150원이었던 쌀 가격이 1946년 3월에는 750원으로 급등하였고, 보리 가격은 90원에서 520원으로 급등하였다.²⁴⁾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초기 식량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곡물가격의 상승에는 소련군대에 대한 과도한 공출도 작용하였다(김성보 1993, 868). 1946년 2월 발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 등 강제적인 비상조치를 내놓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양호했던 평안북도의 경우, 4월-9월

21)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256.

22) 리수근, ‘민주건국의 첫 나날에’, 로동신문, 1985년 6월 17일자.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서울:선인), p.289(재인용).

23) 박일규, 2002,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2권 제1호, p.312. 1950년까지 군, 읍, 면에 인민시장이라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물품 교환이 이루어졌다.

24) 45년 말과 46년 초의 겨울에 이북지역은 최대의 식량난을 겪었다.

사이 부족한 배급식량이 49만 6413석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소련군에 양도된 식량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45년 북한의 곡물은 1,108만 5천여 석(섬)이었는데, 이중 244만 섬이 소련군대에 공출되었다.²⁵⁾

38선을 기준으로 미소 양군의 점령은 화폐의 유통을 가로막았다. 일제시기 이북 지역의 공업지대로 인해 이북지역에는 총 5-6억 엔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그리고 소련군이 진주할 당시에는 1억 1천 300만 엔의 화폐가 유통되었다(전현수 1993, 304). 그러나 미소 양군의 점령에 따라 이북지역에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신용대부가 중지되었고 이로 인한 이북지역의 산업 마비는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이북지역의 식량문제는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위원 준비를 위한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소련당국은 식료품, 경공업원료, 섬유피혁제품, 공업시설부품의 공급 등을 심의 사항으로 제시하였다(전현수 1993, 296). 해방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이북지역은 식민시기에 목재 및 벌채, 광석 및 채굴, 야금과 화학이 기간산업을 형성했던 반면에, 해방 후 소련군정은 식료품과 기호품 생산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²⁶⁾ 이러한 산업활동의 변화는 해방 후 미소 점령으로 인해 이북지역에 식료품과 기호품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이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던 남한과의 밀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식료품 등 경공업 제품의 부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소공위의 경제 협력의 부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북과 남한의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밀무역은 남한 민중뿐만 아니라 이북 민중에게도 매력적인 수익 분야였다. 박사달은 “일제 때 하급관리였으나 해방 후 북한 정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얻을 수 없어서 밀무역에 투신하였다.”²⁷⁾ 황영일의 증언은 당시 미소 점령 속에서 소비재 생산의 남북 불균형과 이북 민중에게 밀무역을 통한 수입의 매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해방 후 남북 간에는 밀무역이 성행했다. 북에서는 명태를 많이 싣고 이남으로 내려왔고 남에서는 경유, 운동화 등을 팔았다. 이북에서 명태 한 짝(약 20만 마리)에 2,000-2,500원 한다면 이남에서는, 특히 포항이나 부산에서는 (이북 돈으로) 13-15만 원에 팔렸다. 이 돈은 이남의 화폐로는 50만 원이었고, 구화폐(일본 화폐)로는 100만 원에 해당하였다. 조선은행발권 화폐나 이북 화폐는 상호

25) 북한연구소,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황해도편』 서울:북한연구소, p.194.

26) 국토통일원, 1986, 『북한 경제 자료집』, pp.382-383.

27) 김귀옥, 2002, 앞의 책, p.64.

유통이 안 되었지만 일본 화폐는 1946년까지만 해도 유통이 되었다.²⁸⁾

토지개혁 단행 이후 이북이 추진한 정책은 산업의 국유화였다. 해방 당시 총산업의 대부분은 일본인 소유였고, 산업자본의 투자액은 일본인 소유 기업소가 95%-97%였고, 조선인 소유 기업은 3-5%에 불과했다. 중요한 산업에 대한 국유화는 일본 식민시기 동안 이루어진 이북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해방 직후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적산몰수위원회, 함남인민위원회의 적산관리위원회, 평남정치위원회를 통해 일본인 소유 기업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의 일본국가와 일본인 및 일본단체와 조선인민족반역자들의 모든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 이후 10월 초까지 일제, 민족반역자 소유의 1,032개 공장, 제조소, 탄광, 광산, 발전소, 체신기관, 은행, 문화기관들을 국유화하였다(김광운 2003, 315). 따라서 이러한 국유화 조치는 소유관계의 법률적 확인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소유는 해방 직후 이루어졌다(김광운 2003, 314). 그러나 민간기업의 사적 소유와 경영권은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국유화 조치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도 나타났다. 일본인과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업소유권도 박탈당했으며, 민간에서는 개인 소유의 기업도 몰수하고 있다는 여론이 발생하였다(김광운 2003, 316).²⁹⁾ 그리고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하여 친일파로 몰려 병원이 차압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의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소련점령군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지개혁과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방 후 친일파는 이미 1945년 말까지 월남한 상태로 친일파의 토지 몰수와 적산기업에 대한 국유화는 큰 저항 없이 집행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토지개혁과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의 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농민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나타났다. 소작농 등 빈농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북지역에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었고, 노동자들은 남녀의 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암스트롱 2006, 146). 또한 아동에 대한 노동이 금지되었다. 반면에 토지개혁으로 인해 1946년 4월에만 5만 명 정도가 월남하는 계기가 되었다.

28) 황영일의 증언, 김귀옥, 2002, 앞의 책, p.64.

29) 1946년 10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개인기업 장려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3) 사회적 요인

1944년 기준 조선의 미취학자는 전체의 2/3에 달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³⁰⁾ 3.1 운동 이후 향학열이 높아졌지만, 국내의 제도 교육은 높은 향학열을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반면에 관서지방은 개화기에 개신교를 주도적으로 수용한 지역으로 이후 높은 교육적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이광린 1983, 32). 1910년까지 장로교회수가 평남 162개, 평북이 98개, 황해도가 102개였다. 그러나 서울의 개신교 수는 11개소에 불과했다.³¹⁾ 이광린(1983)은 관서지방이 개신교 수용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자립적인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상인들의 존재, 양반의 부존 등 사회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이광린 1983, 40-41).

개신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관서 지방민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도 했기 때문에 1910년뿐만 아니라, 1943년 현재 장로교회가 남한보다 관서지방에 더 많이 분포할 수 있었다(이명선 1983, 23). 이러한 관서지방의 종교와 교육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943년 현재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사립학교의 수는 264개이며, 반면에 남한지역의 사립학교는 80개교에 불과했다(이광린 1974, 444). 그러나 해방 전 평안남도의 평양고등보통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의 학생 중 노동자와 빈농의 자제는 한 명도 없었다(김광운 2003, 322). 이북지역은 남한보다 교육환경이 좋았지만, 대다수 소외된 계층은 교육 환경의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이북지역의 종교는 자본가와 지주층의 지지를 받았던 조선민주당과 관련이 깊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종교계(개신교, 천도교)가 전체 지역인민위원 3,459명 중 2.7%인 94명이 포함되었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간사였던 강양욱 목사는 조선민주당 계열이었다(장운철 2005, 7). 이와 같이 소련군정은 종교 이유로 개신교를 정치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남민들의 개신교는 반공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북의 천도교는 소련군정에 협력하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식민시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성보(2004) 연구는 평안북도 선천을 중심으로 해방 후 지역갈등을 살펴보고 있어서 이북지역의 기독교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성보에 따르면, 선천지역의 기독교계는

30)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1946,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p.347.

31) 백락청, 1973,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p.285 ; 이광린, 1983, 앞의 논문 p.33 참조.

‘105인 사건’ 등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던 외국인교사들의 방출되어 재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성보는 재정적 지원의 단절로 선천 지역 교회가 지주자본가 계열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어 1930년대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1940년대에 보수화되었음을 규명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계의 자본가계층의 의존도로 인해 해방 후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에 선천의 기독교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성보 2004, 183). 기독교계의 자본가에 대한 의존성은 1932년에 발간된 『선천요람』에도 나타난다.

금일의 기독교가 자기네가 선진하고 모든 방면에서 승리를 박한 것을 자공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교육을 부르짖고 상업을 하게 되어 이 교회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교회방면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상업자는 교인이라는 힘 안들이고 얻은 고객과 서로 신용이 있으니 다른 고립적 상인보다 번창하게 된다. 이리하여 자기네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되고 대중이 아무리 빈궁화해가더라도 예배당을 유지해 나아갈 중성신도는 이 승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앙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지지해가는 자 복을 받는 것으로 믿게 된다. 교역자는 그래서 부한 자 앞에서 구구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한 사교적 경험이 있는지라 무산신도의 앞에서는 냉정을 감싸놓은 어물적하는 태도를 펴놓게 된다.³²⁾

이북의 종교계(개신교)는 일제식민 말에 자본가계층, 지주계층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수화는 일반 민중(노동자, 농민)과 점차 괴리되어 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북지역의 민족주의 계열 역시 이북의 공업화로 성장한 노동자계층과 자본가계층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³³⁾

<표 2-6> 1946년 9월 평남지역 중등 이상 입학생 사회성분

성분	명수	비(%)
혁명자	35	0.6
노동자	1,220	18.5
농민	3,680	60.7
지주	55	0.9
기타	1,176	19.4
계	6,066	100

출처: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서울:선인, p.322.

32) 김성보, 2004, 앞의 논문, p.183(재인용)

33) 오미일, 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 서울:한울아카데미 참조.

1946년부터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을 실시하던 이북의 인민위원회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간부양성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북 당국은 행정10국의 교육국에 교과서편찬부를 설치하고 ‘학교교육임시조치요강’을 바탕으로 학교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지도하여 나갔다. 1946년 2월 임시인민위원회는 인민교육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결과, 모든 교과서가 한글로 만들어졌고, 1946년 말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교체제와 교육제도가 개선되었다. 1947년 9월에 유치반 신설, 인민학교, 중학교의 학년 단축, 고급중학 창설, 기술교육 진흥, 야간학교·직장학교·성인교육기관의 통일 자격부여 등이 이루어졌다.³⁴⁾ 이 결과, 1946년 9월 평남지역 중등이상 입학생은 노동자와 농민계층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해방 전까지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해방 후 빈농과 노동자층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월남민의 월남동기와 계층, 월남유형, 그리고 월남 시기는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45년 말 월남민의 경우, 45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단행되었던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친일파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 조치와 소련군정의 친일파 조치로 인해 친일파 부류가 그 주류를 형성하였다.³⁵⁾ 45년 말까지의 월남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 동반형 월남형태를 띠었다. 이는 이동원·조성남(1997)이 45년 월남유형을 가족 동반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꺾을 같이 한다. 그리고 당시 월남민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학력수준이 높은 지주계층 및 식민시대 만주군과 경찰 등 친일정도가 강한 부류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⁶⁾ 그리고 45년 12월 말부터 46년 초까지 이북지역에서의 반탁운동과 소련군정과의 충돌로 인한 정치적 월남 동기를 가지는 단독 월남유형이 초기의 월남민에 포함되었다.

<표 2-7> 1947년 5월-6월간의 개성 전주민 수용소 월남인의 월남 동기

34) 김광운, 앞의 책, p.320.

35) 1946년 초 이북 일제 경찰 출신들이 월남하여 경기도(서울 포함)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이북5 도 청년단체들의 결성을 중용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북 청년단체들과 각종 부정, 부패를 조장하였다.

36) 일본군 출신과 함께 남한군의 중추를 형성했던 만주군 출신 친일파 군인들 대부분은 1945년 말경에 월남했다. 일본이 패망하자 이들 만주에 있던 친일파 군인들은 원용덕과 정일권이 중심이 되어 ‘동북대한민국보안사’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평양에 집결해 향후 거취를 논의한 이후 월남하였다.(강정구, 앞의 논문, p.281)

월남이유	생활난	귀향	구직	사상	상용	향학	총계
계	20,731 (65.1)	9,400 (29.5)	892 (2.8)	502 (1.6)	252 (0.8)	82 (0.3)	31,859 (100.0)

출처: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9.

1948년 조선은행이 1947년(5월-12월) 동안 조사한 월남민들(127,663명)의 직업을 보면, 무직자가 68,248명으로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13,948명), 상업(10,348명) 순이며 이 기간의 월남민들의 피부양자의 수는 전체의 30%에 지나지 않고 있다.³⁷⁾ 그리고 인텔리계층의 경우 교사(1,954명), 의사(309명), 서기(1,557) 관리(1,012명), 학생(5,348)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2-7>에서 나타나듯 귀향인구를 제외하면 사상에 의한 동기는 적었고 오히려 생활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5년 말부터 46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친일청산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월남민의 직업별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47년의 월남민의 경우 북한의 경제악화로 인한 생계형 월남민이 많았으며, 일제 부역 정도가 낮았지만 소련당국에 비협조적이었던 교사, 서기, 관리, 그리고 의사 등이 월남민의 소수를 형성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47년 5월 24일 ‘동아일보’ 기사도 47년 초 월남민의 월남동기 중 식량난을 언급하고 있다.

북조선의 경제적 억압과 식량부족으로 매일 1만 명을 헤아리는 피난민이 38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으므로 군정청에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38선에 7개소의 국영구호 검역소를 설치하고 방역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피난민의 구제와 무임승차, 행방지정, 의복, 식사의 제공, 무료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어 지금 수용소에 들어있는 사람만도 수만 명을 헤이고 있다. 수용소에 들게 되는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30명 내지 50명으로 반을 조직케하고, 반장이 그들이 38선을 넘어오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희망 등을 들어 『눈물의 하소연』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건후생부에 보고케 하였는바, …… 이 기록은 식량부족의 심각화와 외인부대의 억압과 그리고 독재정치 등 북조선의 참담한 일면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³⁸⁾

따라서 생계형 월남민의 흐름은 1946년 중반이후부터 47년까지 지속되었다. 45년 말부터 시작된 이북지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사태로 인해 46년부터 남한과 밀무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밀무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46년 중반부터 47년까지의 월남민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 ‘38선 밀

37) 조선은행, 1948, 『조선경제연보』 p. I-9.

38) 동아일보, 1947년 5월 24일자.

무역'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다가 점차 남한을 동경하게 되었을 경향이 높다. 그리고 1946년 이후의 월남민은 '단신으로 월남'한 경우가 다소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인 월남 후 가족 합류', 그 다음이 '몇 명씩 따로 월남'한 경우이다(이동원·조성남, 1997, 84). 1948년 전후의 월남민은 이북에서 김정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체제에 협력하지 않은 지식인계층과 생계형 월남민이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이북에서 친일청산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사례가 있었으나, 곧 시정되었으며 소련군정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역시 대체적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기 월남민들에 대한 인식은 월남동기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과장되는 등 월남민과 이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왜곡되었다.

그는 북한인민군은 현대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4개사단이 있고, 북한의 군사 및 준군사력을 다 합치면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예산은 전부 다 이러한 군사 조직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군사조직이나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45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물론 모든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포함한-38선 이남에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³⁹⁾

대체적으로 월남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 어려웠다. 초기 월남민들은 계속된 식량난으로 강도행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군정의 월남민 구호행정에도 불구하고, 월남민들은 1947년 2월, 반탁과 반공시위가 아닌 “집과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라”고 시위를 하였다.⁴⁰⁾ 중상류층과 남한에 친족이 있는 경우 월남민은 그나마 정착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남한에 친족이 없었던 월남민들의 경우⁴¹⁾ 정착 생활은 어려웠다.

제2절 서북청년단 결성 동기

39) U.S Dept. of State, FRUS, 1948, vol. VI(Washington: U.S. Gov't Printing Office, 1974), p.1311. ; 강정구, 1996, “분단과 한국전쟁의 현대사”, 서울:역사비평사, p.280(재인용).

40) 독립신보, 1947년 2월 12일자.

41) 이명선, 앞의 논문, p.71.

친족이 없는 대다수 월남민들은 이후 근로계층과 하류층을 형성하였다. 이런 현상은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수준이 낮은, 즉 국졸 혹은 중퇴인 경우, 다수가 하류계층을 형성하였던 반면에 고등교육 이상의 월남민은 중상류층을 형성하였다(이명선, p.62).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배경은 조선민주당 계열, 임정계열, 항일경력, 부일협력자 부류, 일본군 자원병 출신, 무당파 부류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선우기성은 식민시기 정주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해방 후 정주청년운동을 조직하여 반탁운동을 하다 체포령을 피해 월남하였다.⁴²⁾ 문봉제는 조선민주당 군당 서기장을 지냈다. 박문은 임시정부 동경대표 조사부장과 정치공작대 중앙본부 정보책임을 맡는 등 임시정부에서 두루 활동하였다. 서북청년단 경기도 위원장을 지낸 김득하는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으로 일제시대 평양부청, 만주수력전기회사 건설국 등에서 다년간 근무했다. 양호단의 이연길은 1938년 당시 함경남도 운남심상소학교 훈도직을 지냈다. 서북청년단 선전외교부장을 지낸 김영근은 일제 치하에서 치안법 위반으로 일본 소압형무소에 구금된 경력이 있다. 이남원도 식민시기에 부역문제(징병을 피하기 위해 형무관이 됨)로 서울에서 형무관으로 활동하며 “서울과 목포 형무소 형무관으로 일하며 빨갱이 수사를 많이 했다.”⁴³⁾ 그는 동지 12명과 월남하였고, 이후 이들은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했다. 서북청년단원이었던 김 모씨는 이북에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으며, 박 모씨는 일제시대 일본군 자원병 출신이었다.

박○○은 손을 끊어 혈서를 쓰고 일본 군대에 지원해 대위까지 했다. 해방 후 김일성 정치가 되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해서 붙잡아 반성할 때까지 때렸다. 그 후 그는 이남으로 도망하여 서청으로 맹활약했다. 전쟁 때 국방군이 들어오자 반공청년회를 이끌고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하여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7명을 찾아 내어 보복 총살을 했다.⁴⁴⁾

서북청년단의 학력수준도 고등학력, 중등학력 등 중등 이상의 학력 수준과 중등학력 이하의 수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서북청년단이 ‘李’를 ‘二’로 적었다는 증언들은 중등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단원들이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첫째, 월남민이 부모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청년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서북청년단원들은 이후 육사 5기와 7기로 군에 충원되거나 경찰로 충원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단원들은 남선과견대와 서북특별대(대한청년단 통합시기)로 활동하게

42) 중앙일보, 1970년 8월 17일, 4면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근대인물자료 참조. 서북청년단 위원장을 지내다가 서북청년단의 대동청년단 통합문제로 서북청년단이 갈등 할 때 대동청년단에 합류하였다.

43) 이남원의 구술, 김귀옥, 2002, 앞의 책, p.51.

44) 이두호의 구술, 김귀옥, 2002, 앞의 책, p.51.

나 일반 군인으로 충원되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위원장인 선우기성은 오산고등보통학교 중퇴, 부위원장 문봉제는 일본대학 경제학부를 중퇴했다. 평안청년회의 총무부장과 서북청년단의 학생부장을 지낸 송태운은 대동공전을 졸업했다. ‘반공의 다이내마이트’로 불린 임일은 일본중앙대학 법과를 수학했다. 박문은 동경 상야미술전문학교와 상해진단대학을 졸업했다. 평양 출신의 박덕영은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를 중퇴했다. 평안북도 강계 출신으로 서북청년단 전라북도 위원장을 지낸 김관영은 일본 소압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김득하는 평남 진남포에서 진남포상공학교를 졸업했다. 김영근은 경도중학을 졸업하고 입명관대 정경과를 중퇴했다. 이와 같이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서북청년단 지도부들은 이북에서 중상류층, 지주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문봉제는 해방 후 고향에서 소천극장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서북청년단 지도부들은 서북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서북청년단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서북청년단원들이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북청년단 진용동지회 회장은 제주 4·3 토벌대인 2연대 연대장이었으면서 일본군 출신이었던 함병선의 삼촌과 친분을 갖고 있었다.⁴⁶⁾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배경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지만, 서북청년단 지도부의 높은 학력수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유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이북에서의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친일청산과 토지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반발로 인해 월남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이북지역의 김일성, 소련군정에 협력적이었던 조선민주당 계열의 인사에 대한 테러뿐만 주로 남한의 좌파계열에도 나타났다. 즉 이북청년단체들이 통합된 서북청년단 결성과 폭력동기는 남한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1) 정치적 원인

45) 조선민주당은 이북에서 지주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46) 김시훈 용 증언(2009년 5월 10일).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이전에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선포가 있었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이 중심이 된 치안대의 치안확보 노력으로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대구의 경우, 좌우 세력이 균형을 이루었지만, 전국적으로 좌파를 중심으로 인민위원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위원회와 인공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 세력은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 그리고 민전으로 통합되어 갔으며, 이 세력은 후견제의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청산 등 주요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웠다.

해방 후 정치적 변화로 기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는 위협받은 일부 월남인들에게 친일청산과 신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조선공산당과 인민위원회의 성장은 위협요인이었다. 이북의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친일청산과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토지개혁으로 인해 도피한 서북청년단 등 이북청년단체에 남한의 좌파 세력은 척결해야만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로 촉발된 신탁논란으로 인해 좌파 세력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좌파 세력의 정치적 성장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중도 정치세력과 우익정치세력에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 1946년 과도입법의원 선거 실시가 확실시 되자, 김구 지지 세력은 “보통 및 비밀선거를 하게 되면 좌익들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며 좌파의 정치적 성장을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⁴⁷⁾ 또한 좌파의 정치적 성장은 친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배치되었다.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전개된 미군정의 정책으로 우익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이북5도 청년단체들의 서북청년단 통합에 영향을 미쳤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은 남한 사회에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좌우익의 탁치 논란이 촉발되었다. 신탁통치결정이 45년 12월 29일 남한사회에 알려지자, 임정을 중심으로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었다.⁴⁸⁾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한국은 정치훈련이 부족해 일정기간 동안 훈정기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결국 45년 12월 30일 송진우가 암살되었다.⁴⁹⁾ 그리고 46년 1월 1일 한민당 총무 자택에 수류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⁰⁾ 김구가 중앙방송을 통해

47)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2, 문서철 34.

48) 송건호, 1985,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까치, p.42.

49) 동아일보, 1945년 12월 31일자.

50) 동아일보, 1945년 12월 20일자.

평화적인 신탁반대를 당부했지만⁵¹⁾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군정청의 직원들과 서울의 사법기관도 반탁투쟁과 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탁에 합류하였다. 반면에 미군정은 신탁통치에 대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으며,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하여 혼란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미국무부 번즈 장관의 ‘미소공동위원회는 조선의 신탁관리를 불필요하게 하는 가능성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는 메시지가 1월 2일 보도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⁵²⁾ 미군정의 하지는 거센 반탁시위 때문에 상해의 임시정부 요인들을 국내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군정과 마찬가지로 반탁시위자 및 테러를 일으킨 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⁵³⁾

모스크바 결정 이후 남한의 정치는 초기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합의를 찾아가고 있었다. 인공과 임시정부 대표들이 12월 31일 회동하여 통일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⁵⁴⁾ 1946년 1월 1일 조선공산당의 반탁투쟁 방침 결정에서 다음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 선회에 대해 한민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등의 반박성명이 잇달았다. 그러나 1월 7일 한민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국민당은 ‘신탁통치라는 제도는 배격하되, 연합국의 우의와 협조는 거절하지 않는 내용’의 4당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튿날 5당회의가 진행되었다.⁵⁵⁾

8일 미군정 하지가 모스크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장령을 발표하였고, 12일 “미소공동위원회로서 조선신탁통치에 대한 정치조직이 편성될 때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장으로는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조선인으로서의 불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들도 노력할 것이다”며 임정중심의 비상정치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였다.⁵⁶⁾ 이후 정당들의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한민당의 수석총무 김성주가 신탁통치가 완전독립에 배치된다고 하며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⁵⁷⁾ 5당 비상정치회의 소집도 좌파의 불참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워싱턴 한인협회장의 남한 상황에 대한 시각⁵⁸⁾처럼, 국내 상황은 권력투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후 좌파와 우파간의 찬탁과 반탁 지지 성명이 오가며 찬탁을 주장한 좌파를 비

51) 동아일보 1946년 1월 1일자.

52) 조선일보 1946년 1월 2일자.

53) 1차 미소공위 결렬 이전까지 미군정은 전반적으로 좌우 세력을 공정하게 대했다.

54) 조선일보 1946년 1월 1일자.

55) 조선일보, 1946년 1월 9일자.

56) 조선일보, 1946년 1월 15일자.

57) 조선일보 1946년 1월 15일자.

58) 조선일보 1946년 2월 1일자.

방하는 뼈라가 뿌러지지 않는 등 파괴적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소앙의 평화적 시위 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탁시위는 계속되었고, 학생들도 반탁시위에 가담하여, 1월 18일 박탁학생들이 인민당과 인민보, 서울인위를 습격하는 ‘학병동맹사건’이 발생하였다. 거센 반탁시위는 46년 3.1절 기념행사가 찬탁 지지자들과 반탁 지지자들에 의해 양분되어 거행되었고, 양측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말았다.⁵⁹⁾ 그리고 반탁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안동에서는 반탁시위대가 ‘박헌영, 여운형, 그리고 김일성을 죽여라’며 격한 반탁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⁶⁰⁾ 이후 찬탁과 반탁 논쟁은 찬탁을 지지하는 좌파에 대한 테러로 점점 변질되어 갔다. 우익의 정치테러는 좌익의 테러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좌우의 대결 및 충돌은 커져만 갔다. 우익의 백색테러는 미소공위가 열리고 있던 와중에도 발생했지만, 1차 미소공위가 휴회된 이후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배제와 더불어 우익단체들의 테러는 강화되었다.

소련군정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반면, 미군정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민주의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를 위해 민주위원을 중심으로 통일된 과도정부 수립을 추진하려던 미군정의 초기정책은 우익 일색의 구성원과 반탁 세력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소련군정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정부와 미군정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소공위 결렬 직후 미국무성의 점령지역담당차관보 힐드링은 “남쪽에서는 모든 일이 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반면에, 북쪽에서는 소련이 한국인을 공직에 앉힘으로써 북조선에 ‘정치적 수도’(political capital)가 되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오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한에서 미군정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군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⁶¹⁾ 그리고 3월 국무성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으려 하였다.

김구일파와도 연결되지 않았으면서 소련의 조종을 받는 세력파도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의 지역내에서 물색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러한 세력에 대해 진폭적인 지지를 보낼 준비를

59) 경찰종합학교, 1994, 『경찰50년사:1945-1994』 서울:경찰종합학교, p.76.

60) *Weekly Military Occupational Activities Report*(Covering week ending 2400 Saturday 18 May 1946), p.226.

61) ‘국무성, 육군성 및 해군성 장관의 회합 비망록(1946.5.22)’, FRUS, Vol.8, pp.681-682.

하게 될 것이다. 망명의 경력 때문에, 또한 그들이 분명히 국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교제에서 얻은 국무성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김구 및 이승만 일파에 대해 결코 어떠한 호의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진보적인 지도세력을 발굴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김구일파로 하여금 …… 진보적인 강령을 채택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강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김구일파가 그러한 강령 채택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⁶²⁾

5월 24일, 하지의 정치고문이었던 랭던은 “남한에서 민주세력 통합문제는 우리의 점령군 및 군정의 힘이 필연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그들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보다 잘 완수될 수 있을 것”이며 “애국적 정당들간의 만족할만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지장군은 그의 최고 권한 하에서 모스크바 결정에 의한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법령을 제정하게 될 비행정적 한국인 내각 및 입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정부사업에 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며 비행정적 내각 및 입법기구 설립을 국무장관에 제안하였다. 미국무성은 6월 초 남한 행정에 대해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선거를 통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의 기초로서 법률 초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자문회의의 선출을 결정하고 광범위한 경제, 교육 개혁을 실시, 임정세력의 배제 등을 지시하였다.⁶³⁾ 또한 미 국무성은 46년 9월 남한에서 행정체제 수립을 지시하였다. 일련의 논의 과정을 거치며 좌우합작, 과도입법의원 설립, 그리고 행정체제 수립 등의 계획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구상들은 트루먼의 중앙집권화된 정부수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으며, 일부 지역이 도 또는 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중앙집권화를 통한 한국인에 의한 민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해방초기 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던 정치적 토대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경찰력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우익세력이 강화되는 행정적 토대가 되었다.

1946년 8월 30일, 미 국무성은 미국이 ‘가능한 한 조기에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를 바라며 독립을 달성하도록 한국민을 원조’하는 것이 유일한 목

62) ‘미국무성이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6년 3월, 김국태 옮김, 1984, 『해방3년과 미국 I』 서울: 돌베개, p.236.

63) FRUS 1946년 vol.8, p.690. 과도입법의원에 발의된 중요한 개혁법안들은 미군정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하지는 경찰 행정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친일파를 숙청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표라고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온당한 비판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토지개혁과 일부 분파의 경찰 지배 방지 등의 목적을 제시했지만⁶⁴⁾, 실제 하지의 미군정 정책은 미 국무성의 성명과 달랐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극우와 극좌를 배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조선공산당 등의 좌파 세력을 배제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미군정 하지는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박헌영 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⁶⁵⁾

미군정은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을 통해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들에게 법적인 제한을 가하고, 조선공산당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정판사 위폐사건을 통해 좌우 세력은 조선공산당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조선공산당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며 점차 정치영역에서 배제시켜 나갔다. 미군정은 좌파 세력의 과도입법의원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선거권의 제한, 불법선거의 묵인 등 비민주적인 방식과 대의원 선출 방식의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2) 경제적 원인

남한의 경제 상황의 악화는 우익 세력과 폭력의 대두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헨더슨(2000)은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에서 농업생산력의 상대적인 회복과 공업생산력의 급격한 쇠퇴가 한국 우파와 폭력의 대두를 초래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⁶⁾ 산업의 쇠퇴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은 우익의 재정적 지원 속에서 청년들이 테러와 폭력의 준군사 기구에 충원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표 2-8> 해방 후의 산업쇠퇴(1944년 6월과 1946년 11월 비교)

	기 업 체 수				노 동 자 수			
	해방이전	해방이후	감소한 수	감소율	해방이전	해방이후	감소한 수	감소량
공업	9,323	5,249	4,074	43.7%	300,520	122,159	178,361	59.4%
광업	1,239	55	1,184	95.6%	179,826	4,660	175,166	97.4%
운수업	1,427	259	1,168	97.9%	80,128	80,128	69,945	87.3%

64) ‘미국무부 보도자료’, 1946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1996, 『대한민국사자료집-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서울:국사편찬위원회, pp.139-140.

65) ‘한국상황’(비망록), 1946년 6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 1996, 『대한민국사자료집-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서울:국사편찬위원회, p.91.

66) 그레고리 헨더슨 지음·박행웅·이종삼 옮김,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한울아카데미, p.222.

출처: 金哲, 『韓國の人口と經濟』, p.174. ; 고준석 지음·박기철 옮김, 1989, 『한국경제사』, 서울:동녘, p.96.(재인용)

해방 전 남한의 공업생산액은 1937년을 기준으로 방직공업, 식료품공업, 기계기구 공업, 기타 제조업이 이북지역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차지했으며, 이북지역은 금속 공업, 화학공업, 와기 공업에서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도우현 1976, 49). 남한은 주로 소비재 중심의 공업이, 북한은 중간소비재 공업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양분된 산업구조 속에서 해방 후 남한사회는 전반적인 산업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해방 후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기업체의 감소와 노동자 수(실업률)이다. 기업체의 경우, 공업, 광업, 그리고 운수업에서 각각 43.7%, 95.6%, 97.7% 감소하는 등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폐업 원인의 70%가 원료부족으로 지적되었다.⁶⁷⁾ 기업체의 감소는 자연히 노동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연히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더욱이 해외 귀환 인구나 월남인의 유입으로 실업률은 가중되었다. 남한의 전반적인 실업률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당시 조선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47년의 서울시, 경기도(인천, 개성 제외), 충청북도(청주 제외)의 실업률은 총인구의 20-30%에 달했고, 실업 연령은 15-24세의 연령과 45세 이상의 연령이 80% 이상을 차지했다.⁶⁸⁾ 그리고 <표 2-9>에서 보듯, 실업문제는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등 전체 산업에서 나타났다.

<표 2-9> 전 직업별 실업자 수(1946년 11월 15일)

실업 전 직장	성별	전체	실업	계
공장사업장	남	82,170	52,132	134,302
	여	24,707	28,946	53,653
	계	106,877	81,078	187,955
광산사업장	남	65,056	35,070	100,126
	여	14,297	8,175	22,472
	계	79,353	43,245	122,598
사업소상점	남	49,252	31,298	80,450
	여	13,731	17,066	30,247
	계	62,983	48,364	111,347
농업	남	91,519	59,395	150,914
	여	34,075	25,298	59,373
	계	125,594	84,693	210,287

67)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203.

68)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204.

운전사업장	남	15,943	16,370	32,313
	여	2,851	4,801	7,652
	계	18,794	21,171	39,965
토건사업장	남	53,758	65,513	119,271
	여	13,841	8,672	22,513
	계	67,599	74,185	141,784
기타	남	130,752	64,251	195,003
	여	45,251	47,533	92,784
	계	176,003	111,784	287,787
합계	남	488,450	324,029	812,479
	여	148,753	140,491	289,244
	계	637,203	464,520	1,101,723

출처: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203, 204.

식민시기 남한의 경제는 일본을 통해 원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던 수입대체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원료 수입과 중간재의 생산은 전반적인 산업과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하지의 경제 고문인 번스가 해방 전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인 소유의 재산 처리와 더불어 생산자원의 확보와 통제⁶⁹⁾, 국제무역 진흥, 고용의 유지, 산업촉진 정책이 필요했다(Bunce 1944, 69). 그러나 46년 1월 말 미군정의 발표처럼⁷⁰⁾,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원조경제에 의존하였다. 미군정은 국내생산을 촉진시키기보다 잉여 농산물 및 가공품(통조림류), 의류(남은 군복 등), 일용품잡화(비누, 수건, 치약, 성냥, 화장품, 휴지, 문방구 등) 등을 수입하였다(고준석 1989, 97). 국내 산업의 촉진과 고용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물가지수는 1946년과 1947년에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였고, 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실질임금도 급격히 하락하였다.

1942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전체경지의 65.9%인 249.4만 정보가 분포되어 있었다(나민수 1996, 2). 그리고 남에는 논 면적이 132만 정보로 밭 면적보다 많아 논농사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남한의 자작농과 자작겸 소작농은 38.8%였고, 소작농 등 토지가 없는 농가가 61.2%에 달했다. 이러한 농업구조 속에서 해방 후 오히려 곡물수확량은 감소하였다. 1940-44년의 수확량 평균을 기준으로 1945년의 수확량은 72%, 1946년은 79.1%, 1947년의 경우도 해방 전의 수확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한의 전반적인 곡물수확량 감소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69) 번스는 자연자원의 국유화와 더불어 한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자원의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를 혼합하는 혼합경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70) 서울신문 1946년 01월 25일자.

미군정의 곡물통제정책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이북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곡물 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작농의 비율이 높은 남한의 농업구조의 개혁없는 곡물통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방 초기에 나타난 급격한 통화팽창과 더불어 미군정의 곡물매입은 통화 팽창을 초래하였다.⁷¹⁾ 이러한 통화팽창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

45년 12월부터 곡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식료품과 기타 물가도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량과 식민시기의 통제정책에서 벗어난 상인들의 이윤극대화과 투기자들의 매점매석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에 미군정은 45년 10월, 법령 제19호를 통해 매점매석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46년 2월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고파는 자에 대해 처벌을 언명하였다.⁷²⁾ 그러나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정책과 행정력의 미비로 미군정의 소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김점숙 1999, 13).

<표 2-10> 상품별 물가지수

	8월(하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곡물	100	75	77	94	113	139
식료품	100	117	133	158	192	236
직물	100	162	315	421	770	868
연료	100	108	146	159	199	225
잡품	100	191	197	241	329	369
총평균	100	131	173	214	320	369

출처: 조선은행 조사부, 『서울신문』 1946년 1월 6일.

해방 후 해외의 인구유입과 월남인구의 증가, 그리고 산업의 쇠퇴로 남한의 실업 문제는 각종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철도 준설작업 등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만을 마련하였다. 46년 경제적 이유로 월남인들은 남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힘든 적응기를 거쳐야 했다. 오히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월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타났다.

71) 이에 대해서는 김점숙,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50년) 물가수급정책연구”,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72) 동아일보 1946년 02월 08일자.

<표 2-11> 월남인구 취업통계(1947년)

	5-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농업	10,885	912	797	757	597	13,948
상업	8,410	692	406	505	335	10,348
직공	5,800	910	714	437	204	8,065
교사	1,910	6	5	3	30	1,954
학생	3,826	499	543	246	234	5,348
의사	209	44	30	17	9	309
광부	9,187	4	1	0	128	9,320
어부	595	35	15	7	18	670
광업	606	18	4	0	9	637
서기	1,021	207	162	91	76	1,557
목수	1,187	99	41	44	68	1,439
청부	1,862	61	40	29	17	2,009
여객업	1	1	0	0	0	2
전도사	1	1	0	0	0	2
양복공	291	75	35	0	4	18
운전수	183	65	13	0	14	415
관리	976	0	0	1	35	1,012
사진사	13	0	0	0	4	17
인쇄공	498	0	1	0	9	508
재목상	0	0	0	0	6	6
철공	137	0	0	0	21	158
기타직업	0	72	237	135	266	710
무직	42,189	9,922	8,328	5,421	2,388	68,248
합계	90,464	13,623	11,374	7,715	4,487	127,663

출처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9.

<표 2-11>에서 보듯이 1947년 5월에서 12월 동안 월남인 47년 동안 68,248명이 실업상태에 있었지만, 나머지는 취업을 한 상태였다. 이것은 월남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취업률이었다. 당시 월남민의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었다. 4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월남인들 다수는 농업과 상업 분야에 취업하였으며, 광부와 직공도 각각 9,320명과 8,065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월남민의 교육 수준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김시훈 옹은 중학교 중퇴 학력과 양복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복공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⁷³⁾ 월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었던 한 배경에는 서북청년단과 기업

73) 김시훈 옹의 증언(2009년 3월 29일).

과의 관계와 미군정의 지원도 있었다. 월남민들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였지만, 미군정은 월남민들을 각도에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 초 제주도에 월남민이 입도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이들의 행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들에 대한 기록이 빈곤하기 때문에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⁷⁴⁾ 하지만 제주도 역시 월남인들은 읍면 사무소의 서기 또는 학교의 (준)교사 또는 강사로 취업하였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초등학교 「서기 1949년 이후 학사보고철」과 「단기 4282년도 이강 직원 명부철」에 평안북도 출신이 준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표선면사무소에 월남민 박모씨가 서기로 재직했으며, 당시 성읍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 가시리 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에 월남민이 교사로 재직했었다.⁷⁵⁾

식량난과 실업으로 악화된 남한의 경제난은 월남 청년들이 서북청년단으로 충원되는 경제적 동기와 폭력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월남청년들은 식량난과 교유관계 때문에 서북청년단으로 활용하며 비누 등 생필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다.⁷⁶⁾ 서북청년단에서 ‘반공의 다이어나이트’로 불린 임일은 신문사에 난동을 부리며 활동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원들은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에 대한 테러를 통해 전평 노동자를 대신하여 취업하기도 하였다. 면사무소의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표선면사무소 서기로 있던 박모씨가 권고 사직하게 되자, 그는 이후 CIC 성산포 사무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⁷⁷⁾ 이러한 사례들은 월남민들이 서북청년단원으로 활동하는 경제적 원인이 식량난과 취업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경제적 원인은 이후 서북청년단원들이 군 입대와 경찰로 충원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서북청년단이 유명인구 조작으로 배급식량을 확보했던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3) 사회적 원인

식민시기 조선인의 도일현상과 해방 이후 이들의 귀환은 좌파 세력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토대가 되었다. 일제식민시기 조선인들의 도일현상의 원인은 조선농업의

74) 그러나 본 연구자가 일부 기록과 증언을 통해 관공서 서기와 학교 교사로 취업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75) 표선면 성읍리 이동백 옹의 증언(2009년 5월 10일). 이동백 옹은 당시 태흥초등학교에 월남민이 교사로 있었다는 증언했다. 그리고 이는 기록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동백 옹의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

76) 김시훈 증언(2009년 3월 29일).

77) 상동.

구조적 취약성에 있었다. 즉, 토지소유의 불균형, 농업경영의 영세성, 과잉인구의 존재, 소작제도의 확대 재생산과 불합리성, 저열한 생산기술과 경영능력, 자본의 강력한 농민지배, 자급 경제의 파괴 등의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였다(김광열 2000, 36-37). 일제 식민지배가 시작되고 난 후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환시켰고,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세와 지세부가세를 지주에게 부과했고, 지주는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50% ~ 70%로 고율로 탈취하였다(김인덕 1996, 25). 이러한 제 원인으로 농민들의 탈농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탈농현상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국내 도시로의 이동과 해외 이동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은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공사장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일부는 상인 및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1920년까지 조선인들은 일본보다 만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의 만주 지배가 강화되면서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1920년 이후부터 조선인의 도일이 증가하였다. 이런 데에는 일본 산업화에 따라 일본 내 노동력 부족과 식민지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 그리고 일본 자본주의 발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 경제상황의 악화와 세계공황의 여파로 조선인에 대한 도일 통제정책이 실시되었지만, 농촌 경제에서 이탈한 소작농은 생계를 위해 도일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여 일본의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주거환경도 취약하였다(김인덕 1996, 38-46). 제일 조선인들은 교육수준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한 제일조선인은 소개료 갈취, 노임 착취, 하숙비 과잉 징수 등 피해를 보았다. 도일의 또한 부류는 유학생들이었는데, 3.1 운동 이후 향학열이 높아졌지만, 국내의 제도교육은 높은 향학열을 수용하지 못하여 일본유학이 증가하였다. 1910년대의 일본 유학은 문벌과 권세가의 자녀들을 위한 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20년대의 유학은 고학생들이 주도하였다. 고학 유학생들은 신문배달, 인력거 차부, 일용노동자로 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학비를 벌면서 유학하였다(김인덕 1996, 50).

해방 전 제일 조선인의 경우, 전체 조선인의 95%가 남한 출신이었고, 이중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 80%에 해당되었다(김민영 1995, 74). 그리고 이들 전체 유업자 중 71~72%가 노동자였으며, 강제 징용자를 제외하면 그 수는 1943년 말 현재 50만

명에 가까웠다(강인철 1999, 177). 그리고 이들은 강제 노동자 혹은 이입 반도인과 구분되는, 1939년 이전에 이주한 소위 ‘일반 재일 조선인’이었다(김민영 1995, 185). 강인철(1999)은 징용자들이 대규모 사업장에 배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일반 재일 조선인’들은 영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자유노동자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남한의 빈농 출신이었고, 이들의 평균적인 학력수준은 조선 내 남자의 평균 학력수준보다 낮았다. 재일조선인들은 해방 후 일본에서 정착하여 경제적 성공을 위한 지적, 기술적 기반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1945년 말까지의 귀환은 노동자층이 주도했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 역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재일 조선인을 빨리 송환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정인섭 1996, 27-28).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연합군 사령부의 귀환 휴대 물품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해방 후 민애청, 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부녀총연맹,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이 결성됨에 따라 좌파계열 사회조직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들 조직들은 직장, 학교, 농촌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해외귀환인구는 오히려 좌파가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좌파 계열의 대두와 재일조선인의 귀환은 남한의 보수정치세력에게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보수세력의 조직 및 물리력 강화의 한 배경요인이 되었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핵심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결성과 조직원 충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북5도 청년단체들은 초기에 사적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북청년단원들은 지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서북청년단은 일제 식민시기 경찰과 군인, 조선민주당 지도부, 이북출신 기업인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이북5도 청년단체들은 지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한 사적관계를 통해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월남청년들의 충원을 시도하였다. 월남청년들을 동일한 관계를 통해 충원하여 갔다. 황해청년회는 김인시를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며, 함북청년회는 이종근 그룹과 윤재현 그룹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다. 서북청년단의 핵심그룹이었던 평안청년회는 문봉제를 중심으로 평남 개천 출신의 채기은, 이성수, 김광현 등 소수 청년들의 사적 모임인 평남동지회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평안청년회의 선우기성은 평안청년회 재정부장과 훗날 우파 노총의 사무국장을 지낸 이주기와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월남한 조선민주당, 기업인, 일제 경찰 출신 및 군인출신 인사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평안청년회는 이주기와 선우기성의 지연 관계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⁷⁸⁾ 즉, 이주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해방 후 월남한 기업인, 오계석의 사위였기 때문에 평안청년회는 오계석으로부터 당시 5천원을 후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안청년회는 조선민주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평안청년회의 초기 조직인 평남동지회는 조선민주당 지도부의 알선으로 조직 설립을 위한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 진용동지회 회장은 일본군 중사 출신이었던 함병선의 친척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제3장 정치권력과 서북청년단

서독의 경우,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이행으로 인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서독으로 피난한 동독 피난민들은 서독에서 가톨릭 피난민연맹 사업공동체를 결성하여 자구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들은 서독에서 사회불안의 잠재적인 요소가 아닌 유럽에서 평화를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미군정기 서북청년단은 ‘백색테러단’ 또는 ‘트리블 메이커’로 인식되었다.

해방 후 남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서북청년단이 결성되고 테러를 일으키는데 주요한 배경 요인이 되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세력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3장에서는 서북청년단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서북청년단과 권력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946년 초부터 결성된 이북청년단체들은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등 극우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서북청년단은 해방 후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에 대해 테러를 가함으로써 남북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1946년 초 이북청년단체들은 표면적으로 ‘반공’을 명분으로 테러를 감행했지만, 통합이후 서북청년단은 행동강령으로 한국문제의 국제화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제거를 내세우며 테러 대상을 확대시켰

78) 이경남, 1989, 앞의 책, pp.42-43.

다.

함북청년회는 남로당 결성식에 수류탄을 던지는 테러를 감행하였다. 함북청년회 선전부장이었던 임일은 함북청년들을 대동하여 좌익신문에 대한 테러를 일삼았다. 3월 5일 문봉제가 이끄는 평안동지회는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를 주도하며, 시위대를 이끌고 소련영사관에 투석을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수도청 경찰과 기마대가 출동하여 시위대를 분산시켰지만, 이 시위대는 '인민일보', '해방일보', '자유신문' 등을 급습하여 기물을 부수는 등 백색테러를 자행하였다. 평안청년회의 과격성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좌파 본부를 습격하는 폭력행위 속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이 단체는 정판사 사건 이후 정판사 사옥에서 조선공산당과 충돌하였다. 평안청년회는 또한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언론기관과 단체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평안청년회를 '악마'로 묘사한 현대일보와 전평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서북출신 청년단체들인 함북청년회, 황해청년회, 대학혁신청년회, 양호단 등은 합동작전으로 소위 '공장 탈환작전'을 전개하여 전평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평안청년회는 인천의 노동자 단체에 대한 테러에도 앞장섰다. 1946년 7월 20일, 한국민주당과 독립촉성국민회의 곽상훈과 정해궁의 요청을 받은 평안청년회는 석재민, 박청산, 김관호를 인천에 파견하고 인천지부를 결성하였다. 평안청년회의 인천지부 결성 이후 이들은 인천의 주요 공장들을 '평정'하고 대한노총지부를 조직하였다.¹⁾ 1946년 8월 21일, 경성방직 평정작전은 경성방직 임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한혁신청년회는 인민대표자대회 사건에 관계하는 등 당시 좌파 청년단체와 충돌하였다. 특히 대한혁신청년회는 김일성 살해를 위해 결사대를 몇 차례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남로당 본부와 경기도 일대의 남로당 당사를 습격 점거하는 등 좌파에 테러를 자행하였다.

서북청년단의 백색테러는 남선파견대와 대북공작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우익청년단들이 지방조직 결성을 통해 조직원을 지방에서 충원한 반면, 서북청년단은 지방에서 충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선파견대를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조직하였다. 이 남선파견대는 충남대전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파견대를 보냈으며, 그들은 각 지방에서 합숙하며 좌파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남선파견대가 남한의 좌파테러의 선봉이었다면, 이북 출신청년들은 북파공작대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북파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파공작활동의 대표적인 경우가 김일

1) 선우기성, 1976, 『한국청년운동사』 서울:선문사, p.680.

성 살해 계획이었으며, 서북청년단은 미군의 정보 수집을 위해 소련군정 지역에 침투하기도 하였다.

이북청년단체들과 서북청년단의 극우주의 운동은 한민당 등 우익정치세력, 기업인, 미군정 경찰 관료들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북청년단은 부패 경찰과 더불어 미군정기에 강취와 강탈, 강매, 그리고 귀속재산의 불법적 취득, 우익정치세력들의 후원, 이북출신 기업인들과 남한 기업인들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모금하였다.¹⁾ 평안청년회의 운영자금은 군정청에서 피난민에게 배급되는 구호품 이외에 평안도 출신 유지들의 자금지원과 좌파 테러에 대한 지방과건의 대가를 통해 조달되었다. 평남동지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의 경우에 조선민주당의 정치부장, 조선일보 사장, 대동신문 사장, 이승만 등의 재정적 지원과 우파세력의 지원이 있었다.²⁾ 특히 조선민주당의 이종영은 1946년 3월 평남동지회가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소련대사관을 습격할 때 5천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각 우익청년단체 간부들에게 인원 동원을 종용하기도 하였다.³⁾ 그리고 강탈, 절취, 강제모금에 의한 자금조달도 시도되었다. 정부 수립 후 서북청년단은 지역 사행사업 허가를 대가로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⁴⁾

서북청년단은 준군사적 조직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서북청년단은 숙식을 제공하며 충원한 월남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을 준군사적 대원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를 위해서 서북청년단은 서울과 지방,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합숙소를 설치하였으며,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⁵⁾ 이러한 서북청년단의 준군사적 성격은 경찰력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후일 군과 경찰에 충원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1946년 10월, 대구사태가 발생하자,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철저히 진압하였으며, 서북청년단은 남선파견대를 파견하여 대구 및 부산 일대에서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1947년 3월 이후 제주도에서 파견된 서북청년단은 경찰과 함께 좌파 세력 색출에 앞장섰다.

제1절 미군정과 서북청년단

- 1) 반민특위조사기록, 1949년 5월 20일, 기업인 김두하, 서북청년단에 누차 5만원씩 기부.
- 2) 이경남, 1989, 앞의 책, p.36.
- 3) 이경남, 1989, 앞의 책, p.36. 이종영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조선군 참모장, 헌병사령부 특고과장 밑에서 해외 망명중인 지사와 가족들을 잡아갔고, 교회박해에 앞장선 혐의로 1949년 체포되어 반민법 법정에 서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대동신문을 만들어 반소반공 선전에 열을 올렸다.
- 4) 서울신문, 1948년 9월 23일자.
- 5)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서울:정문사, p.1237.

북한지역에서 1945년 말부터 월남한 청년들은 각 출신지역별로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 통합이전 시기의 이북 5도 청년단체들은 인적, 재정적 어려움을 노정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통합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대두되었다. 외부적으로 미군정의 좌파 탄압과 우익 세력의 물리적 강화요인으로 인하여 1946년 11월 통합되었다. 미군정기 서북청년단의 결성과 성장 과정은 크게 통합이전시기와 통합시기, 그리고 재건서청으로 대표되는 분열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북청년단 결성 이전의 이북 5도 청년단체들의 결성과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고, 서북청년단과 권력과의 관계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이전시기: 이북5도 청년단체들의 발흥

양호단은 1920년 청산리전투에 참가했던 김성이 원산을 근거지로 하여 만든 비밀 결사대로 출발하였다. 식민시대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해방 후 1945년 11월 10일 서울로 남하하였다. 이 단체는 인민대표자대회를 방해하는 일에 가담하였고 뼈라와 격문을 뿌리는 등 반탁에 앞장섰다. 1945년 10월 30일, 대한혁신청년회는 월남 청년들이 최초로 결성한 청년단으로서 유진산(충남 선산) 위원장과 월남청년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⁶⁾ 부위원장 신균(선전부장 겸임), 서기장 백시영, 조직부장 백현영, 훈련부장 조영진, 동원부장 한철민, 재정부장 노지산, 섭외부장 이명재, 섭외차장 한동규, 학생반장 박갑득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대한혁신청년회는 인민대표자대회 방해사건에 관계하는 등 당시 좌파 청년단과 충돌하였다. 특히 대한혁신청년회는 김일성 살해를 위해 결사대를 몇 차례 파견하기도 하였다. 대한혁신청년회는 백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백의사 출신청년이 대한혁신청년회의 회원인 경우가 많았다.⁷⁾ 북선청년회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및 강원도 등지에서 월남한 청년들로 1946년 4월 결성되었다. 이후 이 단체는 남로당 본부와 경기도 일대의 남로당 당사를 습격 점거하는 등 좌파와 충돌을 일으켰다. 황해청년회는 김인시를 중심으로 '황해회'라는 사적 모임을 운영하다가, 1946년 6월 6일 황해도 출신 청년들로 그 세력이 확대되어 결성되었다.⁸⁾ 함북청년회는 두 갈래

6)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181.

7)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183.

8)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184.

의 과로 결성되었는데, 이종근은 종로를 중심으로, 윤재현은 충무로를 중심으로 함북청년회를 각각 이끌었다.

평안청년회는 평양출신들로 구성된 평남동지회로 출발하여 이후 평안북도 청년들의 가세로 평안청년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평안청년회는 1946년 4월 중순 동아일보사 3층 회의실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반공’, ‘박탁’, ‘자주독립’ ‘통일’을 4대 강령으로 정하고, 회장에 조선민주당 사무차장 백남홍, 부회장에 선우기성과 문봉제, 송태운, 채기은 등 임원을 구성하였다.⁹⁾ 평안청년회는 이후 서북청년단의 핵심을 이루었다.

2) 통합시기 : 서북청년단으로의 통합

서북청년단 통합의 정치적 배경은 미군정과 우익 세력의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있었다. 대구 10·1 사태 이후 미군정 하지는 전국적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우익세력도 물리력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서북청년단의 통합을 중용하였다. 1946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조선민주당의 이종현, 백남홍, 대동신문사 사장 이종영, 백의사 단장 강동진 등이 서북 출신 청년단체의 통합을 주선하여 서북청년회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¹⁰⁾ 서북청년단은 몇 개월의 내부 진통을 거친 후, 1946년 11월 30일 평안청년회, 황해청년회, 대한혁신청년회, 함경북도청년회, 북선청년회, 양호단 및 강원세력 등 7개 단체가 서북청년단으로 통합하였다.¹¹⁾ 통합 이후 서북청년회는 1947년 1월 17일 황해도 청단지부를 조직하는 등 각 지방으로 지부를 확대하였다. 서북청년단의 통합은 임정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¹²⁾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우익세력과 정치적 동반관계였고, 점차 미군정과의 관계도 협조적으로 변화되었다.

<표 3-1>서북청년단의 구성

중앙부서

9) 기타 임원으로는 총무부장 송태운(宋泰潤), 조직부장 이성수(李成秀), 선전부장 채기은(蔡基恩), 정훈부장 강시용(姜時龍), 재정부장 이주기(李周基), 사업부장 김성주(金聖柱) 등이 있다.(이경남, 1989, 앞의 책, p.43)

10) 이경남, 1989, 앞의 책, p.55

11) 동아일보, 1946년 12월 1일자.

12) 대통청년단 통합 문제로 김구 지지 세력과 이승만 지지 세력으로 양분되고, 이승만 지지 세력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게 된다.

중앙집행위원장 - 선우기성(평북)
 부위원장 - 장운필(함북), 조영진(함남)
 총무부장 - 김성태(황해) 총무차장 - 문희모(강원)
 조직부장 - 전두열(함북) 2대 조직부장 - 장창원(함북) 차장 - 장동춘 임용태(평북)
 선전부장 - 손창섭(함남) 부장 김종정
 정치부장 - 강시룡(평북)
 훈련부장 - 반성환(함북) 김홍열(황해) 차장 - 강공희(황해) 장복성
 사업부장 - 김성주(평북) 차장 김경신(평북)
 정보부장 - 이주효(함북) 차장 이양래(황해)
 학생부장 - 송태운(평남) 후임 - 김주룡(함북) 차장 임약철
 여성부장 - 김경배(강원) 강은순(소인)
 감찰위원장 - 이영호(황해)
 감찰부위원장 - 차종연(평남)
 감찰부장 - 박상준(강원)
 심사부장 - 손달수(황해)

출처: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p.1196.

문봉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단원의 수는 2만 내지 3만 명이었고, 세력이 커질 때는 7만에 가까웠다. 서북청년단은 서울에서만 각 구지부 아래 50여 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였고, 각 도(道)에 파견대를 두었다.¹³⁾ 남선파견대는 서북청년단의 준군사단체(paramilitary group)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으며, 총본부와 지부를 조직하여 좌파 탄압에 앞장섰다. 장택상 수도경관청장으로부터 ‘반공의 다이내마이트’라고 불린 임일은 남선파견대를 이끌면서 좌익과 각 지역에서 충돌하였다.¹⁴⁾ 남선파견대의 지부와 주요 구성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서칭의 남선파견대와 주요 구성원 명단

남선파견대 총본부	위원장- 임일(길주)
	부위원장-전희벽(초대, 평북), 전창록(2대, 평북), 김희현(충남담)

13) 문봉제, ‘서북청년회’, 중앙일보, 1972년 12월 21일자 5면.

14) 이경남, 1989, 앞의 책, p.132.

	당, 전라) 총무부장-함성택(함흥) 조직부장-노인규(초대, 평남), 조광현(2대, 평북), 김광현(충남담당, 봉산) 선전부장-김규봉(평양) 김군희(충남담당, 평남) 훈련부장-허태화(길주) 사업부장-김성련(함흥) 학생부장-박태옥(신의주)
충북도위원장	전희벽(평양), 이종익
전북위원장	정덕주(영흥)
전남위원장	계호순(신의주)
시군지부 (위원장 또는 간부)	대전-김경신, 김철, 유원주 공주-승표석, 이기룡, 김병동, 김동희, 용승태 논산-김주곤 부여-이규용, 김해성 천안-김승철 보령-이달주 청양-조중석 아산-이천일 대덕-이월세 강경-전진, 김주곤 청주-이종익, 영동-이만길, 이선정 군산-김득용, 김용익 이리-신철 광주-현칭, 한석률, 김기홍, 배남혁, 김제혁, 김제한, 김덕경 담양-김덕정, 박중천 제주-장동춘, 김재능

출처: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상』, pp.133-134.

3) 재건서북청년단시기

월남 청년들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서북청년단은 전국적으로 지부를 두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대동청년단과의 통합 문제로 인해 서북청년단은 분열되었다. 서북청년단은 지청천이 이끄는 대동청년단으로 통합하려는 통합파와 이승만의 통합반대 요청을 따르는 통합반대파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 시기에 서북청년단원들은 군으로 충원되어 갔다. 미군정은 미군과의 통역 업무를 주로 담당할 군인의 필요성으로 45년 말 영어군사학교를 설치하고, 46년 5월 1일 남조선경비사관학교가 설치되기까지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¹⁵⁾ 그리

15) 임관하지 못한 이들은 남조선경비사관학교로 제1기로 편입되었다.

고 1948년 9월 경비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기 전까지 6개 기(期) 1,200명을 배출하였다. 경비사관학교는 군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6기 등 단기교육(3개월 이하)을 제외하고 제9기까지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북청년단원들은 민간모집이 이루어진 제5기와 제7기에 지원하였다.

군에 입대한 서북청년단원들은 약 5천 명으로 추측된다.¹⁶⁾ 당시 서북청년단은 남조선국방경비대의 소위 '육사 5기'로 대거 임관하였다. 당시 육사 5기의 2/3가 서북 출신 청년들과 서북청년단원들로 충원되었다. 서북청년단 중앙 총본부가 산하도단부와 시, 군지부에 경비대 지원 통첩을 내림으로써 1947년 10월 23일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한 5기생 중 서북 출신이 무려 3분의 2를 기록했다. 지구별 모집에 있어 서울의 경우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도 서북청년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6개월 교육을 마치고, 48년 4월 6일 육군소위로 임관된 5기생 380명은 각 연대에 배치되어 군 숙청에 앞장섰다.¹⁷⁾ 5기생 중 서북 출신자 모두가 서북청년단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원들은 포병대로 입대하기도 하였다.¹⁸⁾ 포병대대에서 서북청년단 출신 병사들은 대대내의 신참 장교를 구타하기도 하며, 다른 병사들을 사병(私兵) 부리듯 하기도 하였다. 일반 병사들은 “후환이 두려워 장교의 말보다 이들(서북청년단 출신)의 말을 더 듣고 있었다. 서북청년단 출신은 대개 노병들인 데다 꾀밭 있는 이북 출신 장교들이 뒤를 봐줘 더욱 행패가 심했다.”¹⁹⁾

4) 미군정과 서북청년단의 관계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의 백색테러는 미군정의 좌파 탄압과 미군정 경찰 수뇌부의 서북청년단체에 대한 비호에도 있었다. 서북청년단은 경무부장 조병옥의 보호를 받았으며, 장택상도 서북청년단의 테러행위를 격려하였다. 좌익 소탕에 성과가 컸을 때 장택상은 우익청년들의 합숙소로 은밀히 찾아가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하였다.²⁰⁾ 미군정 하지가 좌익의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을 해산시킴과 동시에 무차별적인 테러로 문제가 되었던 서북청년회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하자, 조병옥은 “북한 공

16) 선우기성, 1976, 앞의 책, p.729.

17) 이경남, 1989, 앞의 책, p.120

18) 선우기성, 1976, 앞의 책, p.729.

19) 국방일보, 2004년 8월 5일,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197> 7년간 최장수 포병대대장-92'

20) 이경남, 1989, 앞의 책, p.89.

산치하에서 가혹한 비민주적 독재정치에 사달려 갓은 고역을 다 맛본 젊은 청년들이 고향과 부모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고 월남한 그들에게 다소 불법성이 있었다고 해서 서북청년회와 같은 열렬한 반공우익청년단체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미군정의 본래의 임무와 사명에 어긋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또 따라서 서북청년회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로만은 남한의 치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는 실상이므로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된다”며 서북청년단을 두둔하였다.²¹⁾

1946년 7월 조선공산당이 우파와의 합작을 중단하고 정당방위의 역공세로 전환하여 9월부터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10월 1일 대구 시위에 대한 하지의 이북 공산계 간첩이나 앞잡이와 관련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10·1 대구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하지의 의혹과 부합하지 않았다(헨더슨 2000, 232). 오히려 사태는 근본적으로 경제난, 식량정책의 실패, 일제 고등계 경찰의 고문, 통역정치의 폐해, 군정 관리의 부패 등의 문제에 기인하였다.²²⁾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는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46년 말, 하지는 47년 초에 공산주의자들이 총 폭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였지만 하지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증거는 없었다.²³⁾ 하지만 미군정 하지는 미군의 전력을 T/O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²⁴⁾ 한편 미국의회는 군 예산을 감축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고 있었다. 미군의 점진적인 철군과 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우익청년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군정과 서북청년단이 협력적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하지는 좌파의 파업에 대해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의 탄압행위를 허용하였다(Matray 2002, 66). 미군정은 10월 1일 발생한 대구 소요사태에 대해 미군정은 10월 2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과 경찰, 그리고 우익청년단체들이 투입되었다. 10·1 대구 사태에 서북청년단이 파견되었는데, 이 파견대는 남선파견대장 임일의 지시로 황해도 출신의 청

21) 조병옥, 1986, 『나의 회고록』 서울:해동, pp.155-156. 좌익 척결에 앞장섰던 대한민주청년동맹은 소위 ‘대한 민청 사건’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22) 46년 10월 23일부터 약 1개월간 열린 한미공동회담에서 경찰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고, 좌우합작위원회는 하지 중장에게 ①군정 경찰에 대한 일반 민중의 반감을 시정하고, ②적극적 친일파의 처리, ③통역정치의 시정하며, ④귀속재산 처분에 따른 부정 사건 등 미군정 관리의 부패 엄중 단속하고, ⑤선동자, 공산주의자들의 비합법적 파괴적 행동 방지할 것과 식량문제 시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지는 조병옥 대신 장택상 수도청장의 경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병옥 또는 장택상의 경질은 실현되지 않았다.

23) CIG, “The Situation in Korea”(ORE 5/1), 3 January 1947, p.7.

24) CIG, “The Situation in Korea”(ORE 5/1), 3 January 1947, pp.8-9.

년들로 구성되었다.²⁵⁾ 특히 미군정은 “봉기지역의 경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단체로 구성된 의용경찰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1947년 8월 25일, 하지는 “좌파와 소련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공손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워싱턴에 자신이 좌파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명령했다고 통보했다.²⁷⁾ 미군정 하지의 ‘공손의 시대’의 종언은 미군정의 제주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의 급파와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경찰의 파견으로 나타났다.²⁸⁾

하지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미군정내의 우익세력의 후원하에 서북청년단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문봉제의 증언은 서북청년단과 경찰, 그리고 미군정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문봉제는 “우리 서북청년단의 배후에는 조병옥 경무부장과 장택상 수도청장이 이끄는 군정경찰이 있었고, 행동철학은 이승만 박사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만 하더라도 대부분 일제 때의 순사가 해방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있게 되자 자연 좌익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라고²⁹⁾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관계를, 그리고 “처음 미군정 사령관 하지도 우리 서북청년단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전후사정을 알고 난 그도 많이 달라졌지요.”³⁰⁾라며 미군정과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군정과 서북청년단의 관계는 대북공작활동에서도 나타났다. 양호단의 대북공작 활동은 미군 CIC 의 첩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정치동향과 소련군 주둔 배치 상황, 그리고 소련군이 본국으로 반출해 가고 있는 제반 물자의 목록작성 등 기타 부수적인 정보를 캐어 앞으로 있을 미소 공동위원회의 미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7인의 일심회 회원이 선발되어 이북으로 파견되었다.³¹⁾ 이들은 북한에서 위장취업하거나 토굴을 파서 잠복하고 현지 요원들과 접선하여 소련군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양호단원들의 활동은 한국전쟁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미8군뿐만 아니라 미 극동사령부와의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25)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254.

26) HQ XXIV Corps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 *G-2 Weekly Summary* No. III, Incl. #3, p.1.

27) Hodge to War Department, August 25, 1947, JCS Records, 383.21 Korea(3-19-45), sec. 12, RG 218, NA ; James I. Matray, 2002, “Bunce and Jacobs: U.S. Occupation Advisors in Korea, 1946-1947.” Bonnie C. Oh.,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Praeger Publishers, pp.71-72(재인용).

28) 이경남, 1989, 앞의 책, p.120 ;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352. ; 윤장호, 1995, 앞의 책, p.21.

29) 인터뷰, ‘그 때 그 사람, 서북청년단과 문봉제’, 북한 1989년 4월호, p. 128.

30) 상동.

31)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하』 서울:삼성문화개발, p.256.(재인용)

형태가 미 극동사령부 주한 연락처가 운영한 KLO 부대였다.

제2절 이승만 정권과 서북청년단

1947년부터 단정단선론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권력을 획득한 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³²⁾ 이승만은 자신들의 측근들과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정부요직에 임명하였으며, 자신의 정적을 탄압하였다. 서북청년단의 군과 경찰로의 지속적인 충원은 이러한 맥락에 이루어졌다. 미군정기의 관료 충원이 주로 친일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승만 정권하에서 서북청년단의 관료 진출이 두드러졌다. 서북청년단원들은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육사 5기와 7기를 통해 군 장교로 활동하였으며, 서북청년단의 대북공작활동은 특수부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경찰로 충원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충원 경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1948년 말, 이승만과 신성모 내무부장은 서북청년단원들을 한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을 충원하는 결정에 합의하였다.³³⁾

서북청년단은 좌파 테러 및 요인 암살 등 준군사단체로 기능하였고, 각 지방으로 파견되어 좌파 색출작업에 앞장섰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 등 혼란이 발생하자, 특수부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국방장관 이범석의 주도로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다. 호림유격부대, 독립 제1대대, 그리고 보국대대 등이 대표적인 특수부대였다. 이에 따라 서북청년단은 특수부대로 그 기능이 전환되어 갔다. 서북청년단 스스로 조직한 계림공작대(鷄林工作隊)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방부 제4국 동해특별대로 전환되었고, 대북첩보공작과 유격전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⁴⁾ 이후 국방부 제4국이 해체되자, 1949년 2월 25일 동해특별대는 다시 서북청년단출신 367명을 기간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소속 호림유격부대로 개편되었다.³⁵⁾ 이 부대는 창설과 동시에 영등포에서 경북대구 주둔의 제18연대로 이동하여 부대 편성을 완료하고 육군수색학교에서 유격전술 교육을 받았다. 이후 이 부대는 전 대원이 현역으로 편입되기까지 남한 전역의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³⁶⁾ 호림부대원들은 육군수색학교에서 약

32) 제임스 I. 머트레이 저, 구대열 옮김,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서울:을유문화사, p.196(재인용).

33)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8.12.6.

34)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220.

35)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221.

36)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1222.

5개월간의 육격전훈련을 받은 후 제5대대 180명, 제6대대 136명으로 편성되었고 북한군의 복장과 일본군 99식 장총으로 무장하여 설악산지구에 투입되어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호림부대는 49년 거제도 사건에 투입되어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³⁷⁾ 1949년 5월 25일 귀경한 호림부대의 한왕룡 중령은 국무총리 보고에서 ‘완전 소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하였다.³⁸⁾ 계급장도 없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호림부대는 ‘빨갱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붙잡힌 주민들에게 몽둥이 고문, 물고문, 귀를 자르는 등 모진 고문을 자행하였다(김기진 2002, 197). 거제도는 6.25 전후 무고한 양민 700여 명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되었다.

육군수색학교에서 발족한 독립 제1대대는 주로 서북 출신 장병들로 편성되었다. 북한의 대남정치공작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1948년 11월 6일 독립 제1대대가 편성되어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특수부대는 1949년 5월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을 끝내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그해 6월 4일 용진지구에 출동하여 통상 ‘38선 부대’라고 불렸다. 독립 제1대대는 1949년 7월 5일 다시 용진지구에서 수원으로 이동했으며, 7월 15일부로 육일명 제44호에 의해 제5사단으로 소속되어 제주도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의 정적에 대한 정략과 물리적 해결에 앞장섰다. 미군정시기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했으며 5·10 선거에서 이승만과 경합하던 최능진(전 경무부 수사국장)의 후보자추천서가 든 가방이 날치기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봉제의 증언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 전날 서북청년단의 성북지부장 계호순 등 2명이 최능진의 추천서 가방을 날치기 하였으며, 이 날치기 사건은 이화장을 이승만에 기부한 백성욱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서북청년단 출신이며 육사를 통해 군에 진출하여 포병대를 이끌던 안두희는 김구를 암살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서북청년단의 테러행위는 계속되었다. 영월 서북청년단원들은 영월 상동광산 남로당원 노동자를 구타하여 살해하였다.³⁹⁾

정부수립 후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지지 세력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즉 시내 모 신문은 언론자유の特권을 악용하여 모략적 언론으로써 민족분열을 조장하여 왔다. 일례를 들면 초립동이라는 모 신문 편집책임자는 신생정부를 미국에 괴뢰정권의 인상을 주었으며, 한민·비한민, 이박사계·비이박사계라는 등

37) 조선일보, 1949년 4월 27일자.

38) 동아일보 1949년 05월 26일자.

39) 중앙일보 1949년 06월 12일자.

의 신술어까지 조작하여 국회 내외 각 정당 단체 간에 이간을 책동하였다. 금번 독립정부 수립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한 월남동포를 반정부적 음모를 기책하고 있는 것같이 보도하여 남한 동포와 충돌을 선동하였다. 만일 이 신문이 그 과오를 시정치 않는 경우는 단연코 허용치 않을 것을 성명하는 바다.”는 성명을 48년 8월 21일 발표하였다.⁴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북지역의 친일숙청과 토지개혁, 그리고 경제상황의 악화로 월남현상이 발생했고, 초기 월남민으로 구성된 서북지역 청년단체들이 1946년 초에 조직되었다.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토지개혁, 친일청산 등 사회개혁 등의 조치는 빈농과 노동자의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이들은 또한 인민위원회와 당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힘을 강화시켜나갔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서북청년단의 극우주의 정치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남한에서 조직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서북청년단은 월남한 친일경찰과 이북출신 관료들, 우익세력, 지주 자본가, 미군정, 이승만 정권 등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하에 좌파숙청에 앞장서며 점차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946년 말을 기점으로 미군정은 좌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경찰력의 한계를 노정하는 가운데 미군 철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자, 우익청년단 특히 서북청년단을 좌파 탄압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이북지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점차 미군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서북청년단은 반공, 통일, 독립을 구호로 내세우고 좌파 숙청뿐만 아니라 요인 암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김구 암살 등 이승만의 정적 제거에도 앞장서는 등 극우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북파공작대를 파견하여 김일성과 강양옥 목사 암살 테러 등 김일성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북청년단의 북파공작활동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켰다.

좌파 숙청에 적극적이었던 준군사단체로서의 서북청년단은 점차 ‘억압적 기구’로 흡수되어 갔다. 서북청년단은 육사 5기를 통해 군으로 충원되어갔으며, 점차 경찰기구 속으로도 진출하였다. 점차 서북청년단은 준군사 조직에서 경찰과 군 조직으로 흡수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은 제주 4·3 사건 발발 이후에 두드러졌다.

40) 부인신보 1948년 08월 22일자.

제4장 제주 4·3 사건과 서북청년단의 역할

미군정기 1946년 말과 1947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는 극단화되었고, 민중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보다 물리력을 통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5·10 선거 반대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반공이라는 정치적 분위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제주 4·3 사건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와 제주 4·3 사건의 발발 과정과 진압과정을 통해 준군사조직으로서의 서북청년단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무장 봉기 발발 이전의 서북청년단

무장봉기의 원인에 대해 정치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시민권 부인 등 비민주성이 라는 정치적 요인(Carey 2007 ; Sambanis 2001 ; Murshed & Gates 2005 ; Nzongola-Ntalaja 2004 ; 박찬기 2008 ; 서정민 2008), 경제적 빈곤과 경제적 불평 등 등의 경제적 요인(Collier & Hoeffler 2004 ; Müller 1985 ; Müller & Seligson 1987 ; Weede 1987 ; 최동주 2006)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불평등 (Bazançon 2005)이 지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치체제 요인과 결부되어 무장봉기에 구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Henderson & Singer 2000 ; Reynal-Querol 2002 ; Langer 2004 ; Müller & Seligson 1987).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영향을 끼친다(Hegre et al 2001 ; Weede 1987 ; Müller 1985). 즉, 정치권력은 가치와 삶의 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를 이용하여 적개심을 드러내며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 이데올로기를 동원한 탄압으로 반응하게 된다(Carew 1993 ; Spalding 2000). 그리고 정부의 탄압이 그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무차별적일수록 주민들은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Francisco 1996 ; Sambanis 2004, 271).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화적 시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여 무장봉기가 발생하게 된다(White 1989 ; Lichbach 1989 ; Moore 1998).

46년 5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이후 미군정의 좌파 제재 조치,¹⁾ 중앙집권화

1) 1차 미소공위가 휴회되고 나서 미군정은 남로당원들에게 과태료와 구금 등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울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도제실시와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대한 제주도 남로당 지
도부의 불신²⁾의 증가로 미군정 초기 미군정과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협력관계는 지
속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불만이 쌓여감에 따라 모든 문제는 정
치화되어 갔다. 해방 후 일제의 속박과 탄압에서 벗어나 번영의 시대를 갈망하던
민중의 열망은 점차 미군정의 오판³⁾과 분할점령이 공고화되면서 분노로 바뀌어갔
다.

46년 5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이후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정치적 차별,⁴⁾ 좌
파가 배제된 과도입법의원 선거⁵⁾는 제주도 인민위원회 측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과
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한 제주도 인민위원회 세력은 서울 민전에서 좌파가 배제되
었다는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고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반면 제주도 인위 대표의 과
도입법의원 참여는 미군정 하자에게 우파 일색의 과도입법의원에 좌파가 포함되었
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었지만, 인위 대표가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하
지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후 제주도 인민위원회 세력과 남로당 제주도당은 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미·소 공위 재개’, ‘토지개혁’ 등의 정치적 의견이 체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음을 표출하였다. 미군정은 전국적으로 우파의 3.1절 시위는 허가하지
만, 좌파세력의 3.1절 시위는 불허하는 등 좌파의 정치적 권리를 부인하는 등 정치
적 차별을 계속해갔다.⁶⁾

또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⁷⁾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모든 문제는 정치화되어 갔
으며,⁸⁾ 3.1절 시위와 3월 총파업 가담자에 대한 미군정과 유해진 도지사의 숙청에
이어 제주도 남로당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남로당원 뿐만 아니라 일
반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뒤를 따랐다. 어느 교사는 3.1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의 표시로 3월 총파업에 참여하였지만 이후
탄압과정에서 교사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3.1절 시위에 참여했던 성읍

소, 6개월'이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내의 정치집회에서 남로당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2) 과도입법의원으로 당선되고도 입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군정 하지는 강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3) 미군정 하지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오히려 좌파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제문제에 등한시하였다.
4) 1차 미소공위가 휴회되고 나서 미군정은 제주도 좌파세력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옳소, 6개월'
이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내의 정치집회에서 박헌영 지지 발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정치적
차별이 만연했다.
5) 과도입법의원으로 당선되고도 입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군정 하지는 강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6) 그리고 하지는 47년 말 소련의 사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미국 CIA는 이런 하지의 주장
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군정 관료 내에서도 하지의 권력 남용을 비난하였다.
7) 46년 11월, 전제민과 실업자 수가 2만 3천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도민에게 경찰
직을 제공하는 등 경찰 등용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했다.
8) 미군정 하지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오히려 좌파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제문제에 등한시하였다.

리 청년들은 경찰에 구속되어 고문을 받았다.⁹⁾ 점차 제주도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계속되면서 무장봉기 결행의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군정이 47년 3월 1일 사건 이후,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을 진압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과 2대 도지사로 임명된 유해진의 지원을 입은 서북청년단의 횡포는 인민위원회와 남로당에 대한 미군정의 정치적 차별과 악화된 제주도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제주민중의 불만을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46년 10·1 대구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보다 물리적 해결을 선호하게 되었고, 47년 3.1 절 시위, 그리고 이후의 총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3월 총파업 가담자에 대한 미군정과 유해진의 도지사의 숙청과 제주도 남로당에 대한 탄압, 그리고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무력충돌이 제주도의 곳곳에서 일어났다.

1946년 9월 전국적으로 좌우 노동단체들이 임금인상과 식량문제를 내세우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대구의 10월 시위에 대해서는 물리력으로 진압하지만, 우파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등 차별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10월 3일 한민당은 대구사태와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에서 美國정책을 어떤 복선이라 하며 단독조치라 왜곡하고 소련의 원조를 운운하는 반동단체가 있는데 민중과 당국은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는가 규명하고 그런 분자의 숙청을 期하여야 한다.”며 소련의 미소 양군 동시철군 주장과 이에 찬동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튿날 한민당은 대구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진압에 당하여 그 직을 다하지 않은 경부경찰수뇌 이하 책임태만자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순국정신이 결여한 경관은 此際에 일제히 숙청하여야 할 것이다.”며 대구 사태 진압에 철저하게 나서진 않은 경찰관에 대한 숙청을 촉구하고 나섰다.¹⁰⁾

그리고 이후 한국문제가 UN으로 이관되자, 5·10 선거를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세력은 그 본질과 무관하게 공산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문제가 UN으로 이관되자,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임명된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5·10 총선거를 지연시키는 자는 한국의 온건주의자 또는 유엔한국임시

9) 이들은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다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석방되었다.

10) 서울신문, 1946년 10월 5일자.

위원단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공산주의자 또는 소련의 동조자로 낙인찍었다(Matray 2002, 72). 그리고 제이콥스는 UN한국임시위원단의 호주대표인 잭슨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그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Matray 1985, 143). 그리고 김구가 남북회담과 그리고 미소 양군이 철퇴한 후 남북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자, 이에 대한 비난 성명이 뒤따랐다.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는 김구의 주장에 대해 ‘조선을 소련의 위성국가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표현하고 그를 ‘크레몰린궁의 한 신자’로 규정하였다. 독촉국민당도 “미소 양군을 먼저 철퇴시키고 남북 요인 회담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국독립을 지연시키려는 공산당의 주장이므로 우리 국민회부총재이고 소련이 거부하면 남한총선거로 공동 진취하려는 이념하에 국의와 민대 합동을 선창한 김구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를 김구에게 보내어 진상을 물어 보기로 되었는데 여하튼 공산당의 모략이란 실로 새삼스럽게 생각된다.”며 김구의 주장을 공산당의 모략으로 간주하였다. 1947년 12월 26일, 청년조선총동맹은 김구가 유엔위원단과의 협의에서 주장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금반 유엔조위 협의에 김구의 견해가 기 의견서에 다소 복잡성을 띠운 듯 하나 국민은 냉정한 비판으로 지도자와 애국자 그리고 소위 비지도자 비애국자가 판명되는 전민족의 활로가 열린 기회이다. 씨의 의견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민족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을 뿐 외라 현명하신 위원 제공은 개인의 잡음에 미혹치 않을 것을 확신한다. 김구가 소련의 대변을 한 듯 함이 우리 애국진영에는 하등의 문제도 아니며 국제공산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면에 수많은 애국자는 돌아올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족영도자는 일유이 무하고 정당당수는 십수도 무방하다.”¹¹⁾

3.1절 기념대회가 개최되기 전 미 군정청 산하 경무부에서는 1947년 2월 17일 서울 철도경찰본부와 충남경찰처에서 500명의 경찰관을 선발하여 제주도 경찰청에 파견하였다.¹²⁾ 3.1절 발포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3월 2일 무장경찰대가 25명의 학생들을 검거하고 나서 3월 7일까지 모두 석방되었다.¹³⁾ 그 이후 3월 10일 파업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3.1 사건 발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후 경무부장 조병옥이 직접 내도하여 3월 14일, 3.1 사건 포고문을 발표하고 총파업가담과 근무태만 이유로 66명의 경찰을 파면시켰다. 이것은 3월 20일 입법의원재선

11) 동아일보, 1948년 1월 31일자.

12) 윤장호, 1995, 『호국경찰전사』 서울:제일, p.21.

13)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자.

거를 의식한 조치로서 입법의원재선거가 종료되자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숙청과 탄압이 이어졌다. 유해진 도지사의 발령 이후 4월 15일, 3.1 사건 주동자 검거가 시작되었고 총파업 관련자에 대대적인 검거와 고문이 뒤따랐으며, 총파업 관련 관공리에 대한 숙청에 착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파출소 신설 등 경찰력 증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관공리 숙청과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검거 및 취조과정에서 고문치사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유해진 도지사의 부임시기이다. 1947년 4월 21일 유해진 도지사는 부임하면서 경호원으로서 7명의 서북청년단원을 대동하였으며 4·3 발발 이전까지 서북청년단은 제주읍에 300명, 각 면마다 40-50명씩 760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 1947년 10월 18일 경찰후원회가 결성되고, 11월 2일 서북청년회 제주지부가 결성된 것으로 보아 10월 이전에 서북청년단이 입도한 것으로 보인다. 3.1 사건과 3.10 총파업 관련자에 탄압과 빼라사건, 그리고 북촌 오발 사건으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과 유해진 도지사의 비호 하에서 강매와 강제모금, 관공서의 인사업무와 보급문제 개입 등 서북청년단의 월권과 횡포는 제주도민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조직의 자금을 모금하면서 광범위한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결국 11월 18일, 서북청년회 지도자가 CIC에 “단원들이 더 이상 테러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우익이 서북청년회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구타 5건이 적발되었고, 적어도 같은 수의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¹⁵⁾ 그리고 47년 11월 말, 서북청년단의 안철은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이며 자신은 이러한 주장을 미군 방첩대에 입증해 보일 작정”이라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¹⁶⁾

1948년 1월 말, 남로당 지도부가 검거되고, 서북청년단출신들이 경찰에 충원된 이후 서북청년단은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서북청년단과 경찰은 전도적으로 좌파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총살을 자행하는 등 정치적 긴장을 야기시켰다. 2월 9일, 안덕면 사계리에서 마을 청년들이 경찰관을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월 11일에는 고산리에서 도민의 일부가 경찰서를 습격하려던 계획이 발각되어 경찰에 의해 진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치장에 유치되었던 김용철이 고문1

14) 김봉현, 1988, “제주도 혈의 역사”, 『잡들지 않는 남도』 서울:온누리, p.122.
15) 방첩대 정보요약, 1947년 11월 22일-1947년 11월 24일, No.692, 11월21일.
16) Hq, USAFIK, G-2 Period Report 1947년 11월 25일.

으로 사망하였으며, 모슬포 지서에 유치중인 양은하가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 무릉리에서 서북청년 경찰대에 의해 박행구가 구타당하고 총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¹⁷⁾ 또한 서북청년단과 경찰은 48년 3월 29일 한림면 금릉리 청년을 집단 구타하고 총살하였다.

제2절 무장 봉기 발발 이후의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은 47년 제주도에 투입되어 안철 위원장의 공세적 입장에 따라 의용경찰대와 같이 'Red-hunt'에 몰두하며 테러와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온 서북청년단의 일부는 경찰 역할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제주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의 200 여명이 제주서와 서귀포서 그리고 각 지역 파출소에 파견되어 경감 8명, 경위 4명, 경사 36명, 기타 순경으로 제주출신 경찰들을 교체하였다.¹⁸⁾ 또한 4월 3일 이후 서북청년단은 무기를 소지하고 테러와 폭행을 감행하였다. 48년 4월 17일, 이에 대해 제주출신 김대봉 경무부 공보실장은 “청년단체가 경찰에 협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회를 얻어서 무기를 갖고 테러, 폭행, 그 외의 경찰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¹⁹⁾며 서북청년단에 대한 강경입장을 취했다. 한편으로 그는 “제주도의 언론인이 일부 말단 경관에 의하여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양성할 것이며 언론인을 통하여 참다운 언론을 듣고 싶다.”며 “지난 3.1 사건에서 2.7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²⁰⁾ 그러나 김대봉 경무부 공보실장의 사태 수습 노력과 달리 사태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4월 3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선거사무소에 대한 테러와 위협을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은 총선거위반 범죄행위를 예의 적발하여 ‘엄중 처단하도록 할 것’이며 사전 사찰과 수사를 통해 방해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²¹⁾ 4월 5일,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미군정은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편성해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사령관으로

17)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1」. pp.575-577.

18)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p.1233-1236.

19)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20)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21) 동아일보 1948년 4월 4일자.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를 파견하였다.²²⁾ 미군정은 또한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타 지역과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였다.²³⁾ 김정호 비상경비사령관은 “오후 8시 이후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사살해 버리겠다”는 강경한 작전을 전개했다.²⁴⁾ 그 결과 4월 24일 밤 9시경 조천면 조천리에서 거리를 걷던 주민 2명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이 중 문홍목(21)이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²⁵⁾ 1948년 4월 6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경찰과 적극협력을 하여 기 망국적 도배들을 발본색원적으로 퇴치하여 제주치안의 완벽을 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²⁶⁾ 서북청년단의 제주도 파견을 요청하였다.

1948년 4월 6일, 조병옥은 서북청년단 문봉제 위원장에게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500명을 보내달라”며 서북청년단원의 제주도 파견을 요청하였다.²⁷⁾ 이에 문봉제 위원장은 서북청년단 경북도지부에 지시문을 내려 파견대를 모집하였고,²⁸⁾ 경북도지부에서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로 파견하였다. 제주도 평정을 위해 입도한 최치환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500 여명의 서북청년단은 전투를 위한 경찰대였다. 그리고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이 제2차로 파견되어 경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²⁹⁾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전투경찰대 파견이라는 조치와 더불어 조병옥 경무부장이 취한 또 다른 해결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4월 14일, “여러분은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라는 내용의 ‘도민에게 고함’을 발표하여 제주도 상황을 반공분위기로 이끌어갔다.³⁰⁾ 조병옥 경무부장의 포고문에 따른 반공 분위기 조성으로 4.28 평화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의 강경입장과는 달리, 9연대 김익렬 연대장은 ‘선선무 후토벌’이라는 단계적 해결방안을 맨스필더 대령에게 설득하여 부대를 각 지역별로 분산배치하고 무장대가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서 평화회담을 추진하였

22) 독립신문, 1948년 4월 7일자 ;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자.

23)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자.

24)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자.

25) 독립신문, 1948년 5월 4일자.

26)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8년 4월 7일자.

27) 북한연구소, 『北韓』, 1989년 4월호, p.127.

28)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p.1352.

29) 동광신문, 1948년 4월 13일자.

30)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 4월 18일자.

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원과 대한청년단원이 개입된 오라리 방화사건은 미군정의 기만전술로서 미군정의 물리적 해결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5·10 선거와 관련하여 반공 분위기는 전국적 상황으로 나타났다. 5·10 선거를 반대하는 데모를 한 사람들을 검거하는가 하면³¹⁾, 선거 등록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5·10 선거에 출마하는 상대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³²⁾ 등 반공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런 갈등의 본질은 좌파와 우파 또는 공산주의자 여부가 아니라 5·10 선거에 대한 찬·반의 문제였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이후 찬탁과 반탁을 둘러싼 테러와 대테러(Counter-Terror)라는 작용과 반작용이 재현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초기 미군정의 문제해결은 응원경찰과 도민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5월 6일, 딘 장군은 “제주도에 파견된 경찰의 반수(半數)는 5일간의 훈련 밖에 받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 지나친 행위를 하였을지 모른다”면서 “포화 행위를 한 경찰 2명이 미군 군법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³³⁾ 미군정은 제주 4·3 발발 초기의 해결책을 시정하지 않았다.

미군정 책임자 하지가 미국정부에 자신이 좌파를 탄압했다고 보고한 것처럼, 47년 3.1 사건 이후 미군정의 강압적 태도는 제주 4·3 사건의 잠재적 요인이 되었다. 조병옥은 평화회담 결렬 이후, “폭동 만행수습의 근본방침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천명하였다.³⁴⁾ 그리고 조병옥은 제주 4·3 사건의 “근본원인은 조선의 소련방화 내지 위성국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파괴공작의 강행된 그 일단으로 총선거방해공작”에 있다고 하며, “치안수습책은 법을 무시하고 살인·방화 등 파괴만행에 전념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독립을 방해하는 자는 엄중처단하고, 무지몽매로 인하여 부화뇌동한 자는 선무선도(善撫善導)하는 방침 외에는 없다”고 치안수습책을 발표하였다.

김익렬 중령과 김달삼과의 평화회담이 오라리 사건을 계기로 결렬된 이후, 경비대 사령부가 서북청년단의 군 충원을 계획하는 등³⁵⁾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었다. 1948년 6월 초, 송요찬 중령은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는 반공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서북회원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경비대 사령

31) 조선일보 1948년 4월 6일자.

32) 경향신문 1948년 4월 3일자.

33) 우리신문, 1948년 5월 8일자.

34) 서울신문, 1948년 6월 24일자.

35)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8.12.28.

부의 결정이 났다”며 서북청년단 위원장에게 서북청년단 충원을 요청하였다.³⁶⁾ 이에 서북청년단총본부의 지시에 따라 김연일과 대구서북청년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 700명으로 구성된 1개 보병대대가 창설되어 9연대에 편입되었다.³⁷⁾ 1946년 10월 1일 이후 대구 평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의 파견은 그 의도와 이후의 상황 전개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서북청년단의 경찰로의 변신과 전투경찰대의 제주도 파견에 이어 서북청년단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채로 9연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서북청년단도 군으로 충원되어 갔으며, 임시경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경찰 쪽으로도 충원되었다.

제주 4·3 발발 초기, 당시 여론과 제주도를 감찰한 감찰관과 검찰총장 등 관리들의 견해는 군경의 입장과 달랐다. 이들은 경찰의 악질행동을 큰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근영(朴根榮) 감찰관은 “원인은 경찰관의 제주도민에 대한 그릇된 행동에서 일어난 것”³⁸⁾이라고 말했고,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악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³⁹⁾이라면서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⁴⁰⁾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시 여론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22개 정당 사회단체들로 결성된 ‘제주도사건대책위원회’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⁴¹⁾ 9월 6일에는 12개 정당·단체들이 합동으로 ‘동족상잔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⁴²⁾ 지하 선거를 전후로 하여 무장대와 군경간의 대결은 수그러들었지만, 8월 20일 전후로 응원경찰 800여 명이 제주에 증파되었다.⁴³⁾

제주 4·3 사건 진압에 대한 군·경의 강경태도가 ‘평화적 해결’ 입장을 압도하였으며, 정부수립 이후 반공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9월 23일, ‘반공구국총궐기정권이양대축하국민대회’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권인 대한민국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이를 파괴하려는 공산매국분자를 철저히 소탕할 것을 결의한다”며 반공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악질공산분자, 악질무리분자, 악질친일분자를 처단하라는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36)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p.1350.

37)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 앞의 책, pp.1350-1351. ; 이경남, 1989, 앞의 책, p.120. 이 서북청년단대대는 2연대로 교체되었을 때도 제주도에 계속 주둔하였다.

38)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자.

39) 대동신문, 1948년 6월 16일자.

40)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자.

41) 조선일보, 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자.

42) 조선일보, 중앙일보, 1948년 9월 7일자.

43) 조선일보, 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자.

1948년 중반부터 서북청년단으로만 구성된 3개 대대의 충원을 계획⁴⁴⁾하고 있던 군 당국은 제주 4·3 사건 진압임무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북청년단만으로 특별대대를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되어 수색훈련과 지리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던 독립 제1대대, 소위 '38 선 부대'가 1949년 7월 15일부로 육일명 제44호에 의해 제5사단으로 소속 변경되어 제주도로 파견된 이후 1949년 12월까지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⁴⁵⁾

제주 4·3 발발 이후 초기 무장대 진압작전은 큰 효과가 없었다. 제주경비대사령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지만⁴⁶⁾, 경찰의 초기대응작전이 기대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4월 17일, 제9연대에 진압작전을 지시하였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5월 15일 수원의 제11연대를 제주도에 이동시키고, 제9연대와 제5연대 2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 소탕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⁴⁷⁾ 또한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7월 10일 대구 주둔 제6연대 1대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제9연대를 증편시켰다.⁴⁸⁾ 그러나 이 군경합동작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7월 24일 11연대는 토벌작전을 종결하고 수원으로 복귀하였다.

이처럼 사태 진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군 고문단의 인식이었다. 작전 지휘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1948년 9월 29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이범석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미 고문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⁹⁾ 로버츠 준장은 제5여단 고문관 트리드웰 대위에게 “5여단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6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59군정중대장 노엘(Edgar A. Noel) 소령은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무전기, 무기, 탄약의 즉각적인 선적이 시급하다”고 요청하였다.⁵⁰⁾

한편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과 한미행정이양협정을 체결하여 행정이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19일, 이승만 대

44) Weekly Activites of PMAG, 15 November 1948.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건군사』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183.

46) 윤장호, 1995, 앞의 책, p.24

경무부는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차출,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환 총경으로 하여금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47) 국방부, 1996, 『호국전몰용사공훈록』, 제1권, 서울:국방부, p.18.

48) 상동.

49) 『제주 4·3 진상보고서』, p.251.

50) “Incoming Message,” October 6, 1948, *ibid.*, Box 1.; 『제주 4·3진상보고서』, p.252(제인용).

령은 남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맥아더와 면담하였다.⁵¹⁾ 이러한 사이 제주 무장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에 항명한 일단의 군인들이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여순사건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다.⁵²⁾ 10월 22일, 이승만은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정부를 파괴하려는 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중법(重法)에 처하여 장래 화란(禍亂)의 길을 막을 터이니 군정하와 같이 범법하고서도 후대를 받으리라고는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강경진압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소요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방 이후 악화된 식량난,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무장봉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미군정이 군정 말기 남한의 상황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적산토지의 일부를 농민에게 불하했던 반면,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정부에 충성하고 남로당 등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식량 우선 배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10월 29일, 여순 사건에 대한 국회보고가 있는 후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계엄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5·10 선거 당시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최능진을 여수순천 사건 주모자로 체포하였으며, 국회를 상대로 황해도에 북한군이 침입했다는 정치 공작을 단행함으로써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순 사건과 계엄령 발포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11월 2일 순천의 황두연 의원이 인민재판 배석판사로 있었으며, 양군동시 철군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한민당이 입법 제안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등 국회의 절묘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전북익산 출신의 이문원 의원과 강원도 정선 출신의 최태규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⁵³⁾

1948년 11월 4일, 이승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순분자를 색출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

51) 조선일보, 1948년 10월 16일자.

52) 한성일보, 1948년 10월 23일자.

53) 『국회속기록, 제1회』 제94호, pp.748-753.

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며 색출 제거명령을 내렸다.⁵⁴⁾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이 공포되는 등 12월 전후로 ‘반공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하여⁵⁵⁾ 전국적으로 좌익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이 색출되고 구금되었으며 학살이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여건의 영장이 발부되었으며⁵⁶⁾, 남로당원, 민청, 그리고 남로당원에 협력한 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졌다.⁵⁷⁾ 이와 동시에 11월 24일, 이승만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CIC와 유사한 사정국을 두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었다.⁵⁸⁾

무장대를 직접 진압할 수 능력이 없었던 토벌대는 소개령으로 내려온 주민들을 영국이 남아프리카 보어전쟁의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만든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키고, 소개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색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군·경은 제주도민을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D급과 C급의 수감자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실행하였다.⁵⁹⁾ 군·경 토벌대는 3.1 사건 관련자 및 시위 가담경력이 있는 주민, 그리고 무장대와 관련된 주민 등을 검거한 후, D급과 C급 수감자들을 학살하였다. 제주 경찰서 유치장에 “귀서에 예비구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귀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이에 의뢰함”이라는 학살 명령서와 더불어 피학살자 명단이 제공되었다.⁶⁰⁾ 그리고 1948년 12월 31일까지 제9연대는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학살계획’을 채택했다.”⁶¹⁾ 소개령에 따르지 않은 마을 또는 군·경의 통제에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채택되었다.

1) 서북청년단

54) 동아일보, 1948년 11월 5일자. 이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색출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55) CIA, ‘COMMUNIST CAPABILITIES IN SOUTH KOREA’(ORE 32-48), 21 February 1949, p.8

56) 서울신문, 1948년 12월 8일자.

57) 서울신문, 1948년 12월 10일자 ; 서울신문, 1948년 12월 15일자.

58) 민주일보, 1948년 11월 24일자.

59) 김시훈 용의 증언록, ‘소외된 전선, 한라산’ 2009년 4월, pp.70-71. 김시훈 용은 “군과 경찰 그리고 서청은 예비검속을 통하여 입산자들과 더불어 공산당 가입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계엄령 하에서 이렇게 체포된 죄수들 중 D급 및 C급으로 분류된 죄수는 대부분 정식 재판절차 없이 총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색출명령에 따른 총살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60) 김시훈 용 증언록 앞의 책, p.73.

6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제주 4·3 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은 경찰과 더불어 각 파출소에 파견되어 있었으며, 헌병대, 미군 방첩대 등 정부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군정의 방첩대가 이승만 정권에서 논의를 거치며 육군본부 하의 방첩대로 이관되었으며, 서북청년단 출신 또는 제주도에 입도한 월남민들이 등용되는 등 방첩대와 서북청년단이 서로 연계되었다.⁶²⁾ 서북청년단은 정보를 수집한 후, 혐의자를 헌병대 등 정보기관과 경찰로 연행하거나 또는 직접 총살하였으며 무혐의로 풀려난 주민들을 직접 처형하거나 구타하였다.⁶³⁾

밀고와 투서는 당시 경찰, 군 등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색출전술이었다. 밀고자의 말을 근거로 한 색출전술은 서북청년단에게 초법적 권력을 제공하였고 무고한 양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서북청년단은 각 마을에 밀고자(주로 우익청년단원)를 두고⁶⁴⁾, 밀고를 근거로 즉결 처형하는 일이 흔치않았다. 그리고 밀고는 종종 개인적 원한관계에서도 비롯되었다.⁶⁵⁾ 증언에 따르면, 도두동의 자연 부락인 사수동에는 제주 4·3 당시 70호 정도의 가구가 살았는데, 이 마을 문씨 부자의 밀고로 마을 사람 50 여명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후 문씨 부자도 처형되는 일이 일어났다.⁶⁶⁾ 서북청년단은 민간인에게 대리 살상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는 서북청년단의 폭력을 재생산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 경찰후원회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⁶⁷⁾ 속에서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과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타하면서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구조는 경찰과 군으로 충원된 서북청년단에게서도 나타났다. 경찰과 군으로 충원된 이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게 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북청년단원들은 반인륜적 행위를 강요하며, 생명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서북청년단원들은 할아버지와 손자에게도 ‘뺨 때리기’를 시켜 세계 때리지 않으면 구타하였다. 서북청년단의 ‘뺨 때리기’는 돈과 소를 제공하고자야 그치곤 하였다.⁶⁸⁾

62) 이동백 용의 증언, ; 김시훈 용의 증언록, 앞의 책, p.74.

63) 오성찬, 1989, 『한라의 통곡소리』 서울:소나무, p.211.

64) 강승훈 증언, 오성찬, 1989, 위의 책, p.92.

65) 오성찬, 1989, 위의 책, p.89.

66) 오성찬, 1989, 위의 책, p.88.

67) 제주도로 군경으로 급파된 서북청년단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박형요의 증언,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4』 전예원, p.159.

68) 한등길 용 증언,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p.41.

서북청년단의 강탈과 살인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대상으로 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8년 11월 9일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발생한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의 구타치사 사건이다. 보급문제로 불만을 품은 서북청년단원들은 김두현을 감금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다. 서북청년단 김재능 자신은 금품갈취와 고문을 물론 살인과 부녀자 능욕을 일삼기도 하였다.⁶⁹⁾ 또한 제주신보를 강제로 접수하여 김재능 자신이 제주신보 사장이 되어 제주신보를 운영하기도 했다.

1948년 2월경 성산면의 젊은이들의 단독정부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시위 때마다 성산 젊은이들이 지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곤 하였다. 성산포 일부 청년의 주도로 성산면 청년들은 제주신보에 남로당을 탈퇴하고 대동청년단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남로당 탈퇴 성명서'와 명단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1948년 10월 25일 이 명단을 근거로 경비대가 명단의 청년들을 함덕리 주둔 2대대로 잡아들였다. 성산 청년들의 연행에 서북청년단이 동원되었는데, 성산포 청년들이 무협의로 풀려나자, 서북청년단은 청년들을 10월 27일, 11월 1일, 2일에 성산포 '터진목'과 '만물'에서 학살하였다.⁷⁰⁾

2) 서청대대의 민간인 학살

『4·3을 말한다』의 조사내용과 다른 증언내용을 종합해 볼 때, 48년 중반 제주도 들어온 서청대대는 9연대에 편입되었다가 48년 말에서 49년 3월 1일 대대가 이동하기 전까지 구좌면 월정리에 본부를 두고 주둔하면서 제주 동부지역을 순회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1948년 말과 49년 초, 제주 동부지역이 서청대대에 의해 피해를 많이 보았다.

48년 말 9연대의 초토화 작전 이후 무장대가 소규모 또는 개인별로 흩어져 해안마을로 잠적했다고 보고 해안마을에서 무기와 탄약을 찾아내기 위해 해안마을을 수색하는 작전이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48년 말부터 입산자 가족, 도피자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도민들이 무차별 색출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되기 시작하였다. 서북청년단원 또는 서북청년단 출신 군인 및 경찰의 집단학살이 이어졌는데, 군경이 무장대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마을 청년들이 사라진 마을의 경우에 그 피해가 컸다. 1948년 11월 19일, 구좌면 행원리에 서청대대가 민가를 향해 박격포를 쏘며,

69)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p.385.

70)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4』 전예원, p.106.

마을 사람들을 공회당으로 집결시켜 ‘입산자 가족과 폭도 지원자 명단을 대라’며 마을 주민 28명을 집단학살하는 소위 ‘조합장, 반장 학살사건’이 일어났다.⁷¹⁾ 그리고 12월 13일 서청대대가 행원리 마을을 재차 들이닥쳐 ‘굶은재우영’에서 주민집단학살을 자행하였다. ‘행원리는 빨갱이 소굴’로 인식되어 이듬해 49년 1월 18일에도 행원리에 학살이 일어났다.

서북청년단은 소개령 이후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이주한 사람들을 ‘폭도’취급하였다. 마을에 사건이 벌어지면 서북청년단들은 소개민들을 잡아다가 고문과 폭행을 가하였다. 12월 19일, 서청대대 군인들은 ‘폭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김녕리를 수색해 덕천리 소개민들을 연행하여 고문 취조하다가 12월 25일 김녕지서로 넘기거나 ‘옴팡밭’에서 살해하였다. 김녕지서⁷²⁾로 인계된 소개민들은 강제 동원된 민보단에 의해 철창으로 살해되었다.⁷³⁾ 그리고 서청군인들은 “(덕천리) 소개민들을 김녕리의 옛 경방단 건물에 가뒀다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은 죽이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육보였다.”⁷⁴⁾

서청대대는 밀고자가 제공한 명단을 근거로 한동리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1949년 1월 8일 한동리에서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한 사람들’을 서청대대의 주둔지인 월정리 구좌중앙국민학교로 연행하고 모진 고문을 하고서는 1월 9일 학살하였다.⁷⁵⁾ 희생자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무장대의 식량제공 요구에 응한 것이 폭도가 담 행위로 몰려 학살되었고, 이들 중에는 5·10 선거에 참가했던 사람도 있었다. 1949년 3월 1일 서청대대가 이동할 때 월정리 주둔지에서 허드레 일을 하던 소개민들을 처형하였다.⁷⁶⁾

3) 서청특별중대

토벌임무가 2연대로 교체되면서 서청특별중대에 의한 ‘다이너마이트 사건’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 당시 성산초등학교에 주둔했던 서청특별중대는 제주도 서북청년단원으로 충원되었는데, 이들은 군복은 입었지만 일부 지휘관을 제외하고

71)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5』 전예원, p.38.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군인들은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72) 김녕지서는 소속 경찰, 응원경찰, 서북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구성형태는 다른 지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73) 상동.

74)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p.30.

75) 한동리 부내봉 용 증언,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p.44.

76)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p.31·p.39.

계급장도 없었다. 서청특별중대는 주정공장 창고를 수감처로 사용하며, 뼈라, 다이너마이트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만 것을 찾아 여러 마을을 수색하였다.

민간인 학살의 발단은 해방 후 주민들이 고기잡이용으로 사용되던 일제의 다이너마이트에서 시작되었다. 9연대 당시에 초소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고, 9연대도 고기잡이용으로 다이너마이트 사용을 허가하기도 하였지만, 성산포에 주둔한 서청특별중대의 서북청년단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과 소지자들을 색출하여 학살하였다.⁷⁷⁾ 성산면 오조리와 시흥리 주민들이 주정공장에 끌려와 고문을 받고서 일출봉 아래 ‘우뭇개’와 ‘터진목’에 학살되었다. 서북청년단원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진을 사지 않은 주민 또는 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을 보복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서북청년단의 활동은 유재홍 사령관의 부임으로 억제되었다. 서북청년단이 강제로 탈취한 재물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서북청년단에 대한 통제가 시작됨에 따라 사태는 점차 진정되어 갔다. 이후 유재홍 대령은 5·10재선거가 무사히 실시되자 5월 13일 제주를 떠났다.⁷⁸⁾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5월 15일자로 그 임무를 2연대에게 맡기고 공식 폐지되었다.⁷⁹⁾ 또한 제2연대 병력 중 유독 서북청년단원들로만 구성된 제3대대는 5월 15일 전투사령부와 함께 제주에서 철수했다.⁸⁰⁾ 2연대 3대대를 철수시킨 것은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로버츠 준장은 2연대 3대대 뿐 아니라 경찰에 소속돼 있는 서북청년회 출신들을 본토로 복귀시켜 널리 분산시키라고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시달렸다.⁸¹⁾

그러나 당초 미군은 군과 경찰에 서북청년회가 투입돼 지원하는 것을 칭찬하며 장려해 왔다.⁸²⁾ 그러나 사태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서북청년단의 횡포가 지속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자 뒤늦게 서북청년단을 철수시켰다. 5월 18일에는 경찰특별부대가 3개월간의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4) 독립 제1대대

77) 노인들이 제때 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함께 끌려가기도 했다.

78) 동관신문, 1949년 5월 15일자.

79) 『陸本 作命 甲發』 제81호, 1949년 5월 5일.

80) 위와 같음.

81) “Minutes of Conference, 16 April,” April 16, 1949,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8.

8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51, October 1, 1948.

독립 제1대대는 전신인 육군 수색학교에서 출발한 특수부대로서 당시 이범석 국방부 장관의 주도로 1948년 11월 25일 창설되었다. 건국 전후 독립 제1대대와 더불어 호림부대, 보국대대 등이 창설되었다. 육군수색학교 등의 특수부대의 창설 목적은 남한 각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혼란을 진압하는데 있었다.⁸³⁾ 호림부대처럼 육군수색학교는 서북청년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육군수색학교는 1948년 11월 6일 독립 제1대대로 편성하여 훈련을 마친 후 지리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1949년 5월 이후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 6월 4일 용진지구로 출동하였다. 용진지구에 투입되었다 하여 독립 제1대대를 '38선 부대'라 칭한다.⁸⁴⁾ 1949년 6월 20일, 육일명 제7호로 육군수색학교가 독립 제1대대로 개칭되었고, 7월 15일 부로 제5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었고, 9연대 휘하의 11연대 일부 병력이 수원으로 돌아가자 11연대를 대신하여 제1유격대대(대대장 소령 김용주)가 제주도로 투입되어 1949년 8월부터 12월 28일까지 잔여 무장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⁸⁵⁾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병옥의 완고한 사태 해결책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긴장되었고, 점차 물리적 수단이 선호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947년 이후 제주 4·3이 발발하는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은 테러, 구타, 강매 등과 더불어 제주도를 제2의 모스크바로 인식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좌파 색출에 나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제주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은 조병옥의 요청에 의해 증파되었고, 서북청년단은 점차 전투경찰과 군으로 충원되어 갔다. 그리고 4.28 평화회담 이후 발생한 오라리 방화사건에도 대동청년단과 함께 서북청년단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정식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서북청년단은 군과(임시)경찰로 충원되어 갔다. 서북청년단은 경비사령부의 비호 속에서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서북청년단과 서청중대(2연대 2대대 11중대)와 서청특별중대는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1948년 말 대대적인 무장대 색출작전을 벌이면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 서북청년단의 초법적인 행동은 경제 상황의 악화와 정부의 급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세속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적 행동은 유재홍 사령관 부임으로 억제되었으며, 사태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서북청년단들도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다.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건군사』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183.

84) 상동.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3사건 토벌작전사』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158.

제5장 서북청년단의 폭력 행위 동기 분석

기존의 연구에서 서북청년단은 ‘빨갱이 사냥’, 반공의 ‘외인부대’ 또는 ‘학살의 전위대’로서 강조되어 왔다(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7 ; 임대식, 1999 ; 정종식, 2007). 임대식(1999)은 서북청년단은 ‘국가의 물리력을 보완하는 사설단체 수준을 넘어 준국가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반공을 전매특허로 하는 극우’로서 모스크바 결정 이후 좌우의 탁치갈등과 남한의 소요사태로 인하여 서북청년단이 결성되었다고 결성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임대식 1999, 208-209). 그리고 그는 “서청이 남한에서 극단적인 행태로 빨갱이 사냥을 했듯이 제주도에서도 그러했다”며 서북청년단을 ‘빨갱이 사냥’을 하는 준국가기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식(1999)은 제주도에서 서북청년단과 제주도 남로당의 물리적 충돌을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민족주의의 충돌로 바라보며, 반공의 외인부대로서 서북청년단을 미군정과 극우세력이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서북청년단을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다(임대식 1999, 237). 임대식(1999)의 관점과 유사하게 정종식(2007)은 서북청년단을 반공의 전위대로서 무고한 양민에 폭력을 행사한 부정적인 측면과 이북의 공산화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월남하여 우익세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의 측면이라는 양면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서북청년단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등의 진압군의 폭력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밀한 접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토대로 하여 제주 4·3 가해자, 다른 경찰 및 응원경찰대의 폭력양상을 비교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서북청년단은 주로 후방에서 경찰과 정보기관과 협력하며 무장대 협력자, 도피자 가족 등을 색출하고 직접 학살하는데 앞장섰으며, 서북청년단원으로만 구성된 서북대대와 서북특별중대 역시 학살 작전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 장에서는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가 이데올로기적 동기보다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동기에서 기인했음을 보이려 한다.

제1절 이데올로기적 동기

존 메릴의 연구(1980)는 서북청년단을 ‘월남한 반공피난민’으로서 ‘복수를 위해 무자비한 테러로 남로당과 싸웠다’고 서술하며, 뇌물수수, 공갈, 사기 등을 일삼았고, 2월 총파업 이후 경찰과 더불어 공산주의 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체포를 강화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서북청년단의 폭력의 요인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존 메릴 1980, 31).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조직과 활동을 연구한 정종식(2007)은 이북의 공산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반공세력이 이북청년단체를 결성했으며 서북청년단이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테러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에 의해 서북청년단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테러를 일으켰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북청년단체들과 서북청년단의 폭력 사례를 폭력대상과 행동강령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북청년단의 테러는 주로 좌파 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호단은 인민대표자대회를 방해하였으며, 뼈라와 격문을 뿌리는 등 반탁운동에 앞장섰다. 혁청은 인민대표자 대회 사건과 관련되었고, 좌파 청년단체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혁청은 임정요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는 등 임정 세력과 관련되었다. 북선청년회는 남로당 당사에 테러를 가하고 점거하는 등 테러활동에 관여하였다. 함북청년회는 남로당 결성식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테러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문봉제가 이끈 평안동지회는 1946년 3월 5일,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를 주도하고 소련영사관에 돌을 투척하였으며, 인민일보, 해방일보, 자유신문 등을 급습하여 기물을 부수는 등 백색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평안청년회는 정판사 사건 이후, 조선공산당 본부에 진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좌파 언론기관에 테러를 일으켰다. 이들 이북 청년단체들은 주로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 남로당, 그리고 인민일보, 해방일보, 자유신문 등 좌파계열 언론사 심지어 소련영사관과 김일성까지 폭력의 대상으로 하였다. 만포서북청년단은 47년 7월 22일 김일성 특별열차전복계획을 모의하였지만 사전에 알려져 모두 체포되었으며, 양호단의 대북공작활동은 1946년 3월 1일 평양 광장 집회에서 김일성을 향한 테러를 감행하였지만 실패하였다.¹⁾

1) 서북청년단의 이러한 대북공작활동은 이북 경찰대의 공습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47

서북청년단과 이북 청년단체들의 폭력은 좌파 계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서북청년단의 테러행위는 정부요인 암살까지 자행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수복 검사 암살, 기업가이면서 조선신문의 사장이었던 박경영 암살 사건은 서북청년단이 직접 계획하고 행동한 사건이었다.²⁾ 그리고 양호단의 테러는 소련군정에 협력적이었던 강양욱 목사 자택 습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서북청년단의 폭력대상은 조선일보와 대한독립신문사, 그리고 단원과 월남인에게까지 미쳤다. 임일은 대동청년단과의 통합문제로 서북청년단이 내홍을 겪을 당시 통합반대파(이승만 지지파)에 의해 폭력을 경험하였다. 서북청년단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한관제도 폭력의 피해를 입었는데, 서북청년단의 한관제에 대한 폭력은 이북에서 소련군정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였다.³⁾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소련군정에 협조적이었던 조선민주당 계의 강양욱 목사 자택에 테러를 감행하였다.

서북청년단의 핵심이었던 평안청년회는 ‘반공’ 강령과 포고문 제1호, ‘전적으로 좌익을 타도한다.’며 표면적으로 반공을 강하게 드러내었지만, 평안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1946년 8월 통합된 서북청년단의 행동강령⁴⁾에는 ‘반공’ 강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북청년단의 행동강령에서 제거 대상은 ①한국의 국제문제화를 방해하는 음모자들, ②반역 친일파, ③통일을 방해하는 관료 등 3가지 범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북청년단의 폭력으로 지적되는 ‘반공’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주로 좌파 계열의 범주를 뛰어 넘었다. 이처럼 서북청년단의 폭력 대상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상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병대로서의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서북청년단의 행동강령 변화와 폭력은 미군정기 3년의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46년 6월 결성된 평안청년회의 ‘반공’ 강령이 서북청년단의 한국독립의 ‘국제문제화를 방해하는 음모자에 대한 제거’ 강령으로 변경된 것은 남한의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고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1947년 전후 형성되어지는 남한 사회 전체의 반공 분위기가 작용했을

년 8월 27일자 2면).

2)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사 상』 서울:삼성문화개발, pp.110-111.

3) 선우기성·김관석, 1969, 『청년운동의 어제와 내일』 서울:햇불사, p.28.

4) ①38선의 폐지운동 ②청년단체의 통합 ③한국의 국제문제화를 방해하는 음모자들의 제거 ④반역 친일파의 숙청 ⑤남북통일을 위한 상호 민족주의적 투쟁 ⑥통일을 방해하는 관료 제거 ⑦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보호 ⑧민족경제의 안정화와 난민 구호 ⑨국토방위를 위한 정신과 육체의 단련(Hq.USAFIK. G-2 Weekly Summary, 3 June 1947, No.90. 미군정보보고서 Vol.13, p.311).

수 있다. 즉, 1947년에 제주도에 파견된 서북청년단 제주도위원장의 ‘작은 모스크바’에 대한 인식은 당시 일부 좌파 세력의 테러 행동에 소련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미군정 경찰과 우익세력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5·10 선거 방해자는 어떤 정치세력이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낙인찍혔던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모스크바’ 등의 서북청년단의 반공 인식과 폭력행위는 이북 소련점령 지역에서의 정치적 변화 요인, 그리고 남한에서 나타난 우익 세력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에 태도 변화를 고찰하며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서북청년단의 반공주의는 남한 정치의 우경화에 따라 사후적 정당화의 명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소련군정에 협력적이었던 북조선 공산당의 김일성, 조선민주당 계열의 강양욱 목사, 서북청년단의 부위원장을 지낸 한관제, 그리고 찬탁을 주장했던 좌파계열을 대상으로 주로 서북청년단의 테러와 폭력이 발생하였지만, 서북청년단의 주 폭력 대상은 다른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제2절 군사적 차원의 동기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국가수립이 선포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반공주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19일 일본에서 맥아더를 만나는 와중에⁵⁾ 제주 무장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에 항명한 일단의 군인들이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여순사건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다.⁶⁾ 10월 22일 이승만은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정부를 파괴하려는 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중법(重法)에 처하여 장래 화란(禍亂)의 길을 막을 터이니 군정하와 같이 범법하고서도 후대를 받으리라고는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국가보안법 제정과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5·10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최능진을 여순사건의 주모자로 체포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무장봉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소요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악화된 식량난,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

5) 조선일보, 1948년 10월 16일자.

6) 한성일보, 1948년 10월 23일자.

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미군정이 군정 말기 남한의 상황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적산토지의 일부를 농민에 불하했던 반면에, 이승만 정부는 민중의 경제적 위기보다 정부에 충성하고 남로당 등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식량 우선 배급을 실시하였다.

10월 29일, 여순 사건에 대한 국회보고가 있는 후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계엄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였지만 여순 사태와 계엄령 발포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여·순 사태와 계엄령 발포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11월 2일 순천의 황두연 의원이 인민재판 배석판사로 있었으며, 양군동시 철군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한민당이 입법 제안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등 국회의 절묘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전북익산 출신의 이문원 의원과 강원도 정선 출신의 최태규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⁷⁾

1948년 11월 4일, 이승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순분자를 색출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며 색출 제거명령을 내렸다.⁸⁾ 11월 17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공포하는 등 12월 전후로 ‘반공 프로그램’이 가동하기 시작하여⁹⁾ 전국적으로 좌익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색출하였다.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여건의 영장이 발부되었으며¹⁰⁾ 남로당원, 민청, 그리고 남로당에 협력한 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졌다.¹¹⁾ 이와 동시에 11월 24일, 이승만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미군의 CIC와 유사한 사정국을 설치하는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과 동일하게 무장대를 직접 진압할 수 능력이 없었던 제주도의 군경 토벌대는 무장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의심되는 민간인을 색출하였으며, 이 중 C등급과 D등급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¹³⁾ 토벌대는 소개령으로 내려온 주민들

7) 『국회속기록, 제1회』 제94호, pp.748-753.

8) 동아일보, 1948년 11월 5일자. 이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색출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9) CIA, ‘COMMUNIST CAPABILITIES IN SOUTH KOREA’(ORE 32-48), 21 February 1949, p.8

10) 서울신문, 1948년 12월 8일자.

11) 서울신문, 1948년 12월 10일자 ; 서울신문, 1948년 12월 15일자.

12) 민주일보, 1948년 11월 24일자.

13) 김시훈 용의 증언록, ‘소외된 전선, 한라산’ 2009년 4월, pp.70-71. 김시훈 용은 “군과 경찰 그리고 서청은

을 영국이 남아프리카 보어전쟁의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만든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키고 좌파 색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군·경은 3.1 사건 관련자, 시위 가담경력이 있는 자, 남로당원, 그리고 도피자 가족 등 무장대와 관련된다고 의심되는 민간인을 검거하였으며, 수용자들 중 남로당원과 그 가족 등 무장대 가담 가능성이 높은 D급과 C급에 해당되는 수용인들을 학살하였다. 제주 경찰서에 “귀서에 예비구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귀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이에 의뢰함”이라는 학살 명령이 내려졌다.¹⁴⁾

서북청년단은 군사시설 보호 및 정보수집 등을 하며 정부군 및 경찰과 협력관계에 있었다.¹⁵⁾ 서북청년단원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무장대 진영으로 침투하여 무장대 진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마을에 밀고자를 두어 그들로부터 남로당원과 무장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때 서북청년단이 해체돼 구성이 됐는데, 그것이 증문리에 있었다. 그들이 공비를 한 150명 잡았다. 그때 산간 벽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안지대로 내려오라고 해서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공비로 인정을 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적의 아지트도 발견했다. 서북청년단이 민간복을 입고 1개 중대쯤으로 산으로 올려보낸다. 올라가서 공비가 부르면 간다. 가서 잘못하다가 얻어맞으면 “나도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다” 해서 적의 아지트를 발견해 소탕을 한 적이 있다.¹⁶⁾

한림에서는 우리 중대가 습격을 갔다가 공비 습격을 받아서 중대장하고 소대장 한사람 하고 대원이 한 15명 죽었다. 나는 중대장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 감시요원 1개 소대 가량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적이 죽인 것을 보니까 죽창으로 전부 찢러 죽였다...그때 용의자는 200-300명 잡았다.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한 것도 한 150명된다. 그러다가 (1949년) 3월 1일날 교대했다. 2연대하고 교대했지. 특별중대는 2연대에 인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전부 군인이 아니까 인계를 했다. 그 사람들이 빨갱이를 잡는데는 참 용감하다.¹⁷⁾

군과 경찰 등 토벌대의 폭력은 민간인, 경찰관 출신, 그리고 남녀노소 등 그 대상에서 선택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무장대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쳐온 사람, 초토

예비검속을 통하여 입산자들과 더불어 공산당 가입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계엄령 하에서 이렇게 체포된 죄수들 중 D급 및 C급으로 분류된 죄수는 대부분 정식 재판절차 없이 총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색출명령에 따른 총살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4) 김시훈 용 증언록 앞의 책, p.73.

15) Hq. USAFIK, G-2 P/R, No. 1005, December 6, 1948.

16) 서북청년단원으로 구성된 특별중대에 소속되었던 이기봉 용의 증언, 허호준, 2008, “제주 4·3 사건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 논리 - 대계릴라전을 중심으로”, 제주 4·3 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pp.169(재인용).

17) 이기봉 증언, 1966. 3. 15, ; 허호준, 2008, 위의 논문, pp.169-170(재인용).

화작전으로 도피해 있던 민간인, 민보단원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등 폭력의 무차별성을 보였다.

4·3때는 시국이 어수선해서 우리 가족 모두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데, 1949년 5월 경에 오빠가 무장대로 오인받아 지서로 잡혀가면서 저도 같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취조를 하는 것이 '무슨 연락을 했느냐', 연락병이 뭐하는 것인지도 모를 때여서 '모른다'고만 하니 죽도록 매 맞고, 고문 받고 ... 무조건 때리는데 엉덩이뼈가 다 벌어져 버렸습니다. 죽도록 고문 받다가 동척회사로 보내졌고, 거기서 무슨 항목인지 1년을 통보 받고 전주형무소를 거쳐 서울 서대문 형무소까지 열흘간 수감됐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¹⁸⁾

무장대 협력자, 도피자 가족 등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원으로 구성된 특별중대, 그리고 서북청년단출신의 경찰에게서 색출작전에서 혐의자를 연행해가거나 직접 학살하는 등의 폭력 사례가 나타났다. 서북청년단은 민보단원을 연행하여 고문을 하거나 학살하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서북청년단출신의 경찰은 소위 도피자 가족을 연행하여 고문한 이후 학살하기도 하였다.

내전 또는 전쟁 상황에서 성폭력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폭력은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군의 기강 해이 등의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전투사령부의 비호 아래에서 서북청년단은 결혼을 강제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학살하기도 하였다.²⁰⁾ 그리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군사적 차원의 폭력과 성폭력은 응원경찰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서북청년단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도피자 가족, 무장대 협력자 등의 색출 작전에 따라 응원경찰대 심지어 대청 등 제주도민도 이에 관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응원경찰대대에서도 군사적 차원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듯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서북청년단의 극단적 행위는 진압작전이라는 군사적 차원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군사적 차원의 서북청년단 폭력 동기는 응원경찰대의 폭력동기, 폭력의 양태와 그 정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18) 현춘화 용 증언, 상동, p.145.

19) 이영호 용 증언, 상동, p.125.

20) 강인옥 용 증언, p.64.

21) 홍경토 용 증언, p.66.

제3절 정치적 차원의 동기

서북청년단에 대한 평가에서 서북청년단은 이중의 피해를 입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종식(2007)은 공산화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월남하여 우익세력에 이용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대식(1999)도 미군정과 극우세력이 서북청년단을 이용하였다며 서북청년단을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서북청년이 우익 정치 세력에 청부 테러단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보수적인 극우주의 정치운동이 발생한다(Lipset 1981, 125-179). 즉, 전통적인 보수주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에서 기업인과 대토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부유한 집단과 특권층의 지지를 받는 극우주의 정치운동이 출현하게 된다(Lipset 1981, 129). 립셋에 따르면, 극우주의 운동은 문화적, 경제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변화시키려 한다(Lipset 1981, 130).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집단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민병대는 국가 및 사회영역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준군사조직으로서의 민병대는 대토지 소유자, 기업인 등의 경제 엘리트, 정당 등의 지배연합과 관계를 맺으며 이 연합 집단이 국가와 민병대를 매개한다(Mauceri 2007).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지배연합과 연관된 민병대는 종종 현상유지의 동기를 보인다.

서북청년단은 폭력을 수반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였다. 또한 서북청년단은 제주 4·3 사건에서 준군사조직으로 기능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정치적으로 조선민주당 지지집단, 부일협력자, 친일경력자, 임정세력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도부집단은 해방 당시 엘리트에 속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며, 찬탁을 주장하고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좌파세력의 정치적 성장은 서북청년단에 위협 요인이 되었다. 한민당 및 우익청년단과 더불어 서북청년단은 폭력을 수반한 반탁운동을 통해서 극우주의 정치운동을 주도하며 한반도의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부일협력자, 기업인, 미군정 경찰 수뇌부와 친일경찰, 미군정 등의 보수주의 집단의 지원 및 협력관계 속에서 보수주의와 결합되어 갔다. 서북청년단은 남선파견대와 북선파견대를 결성하여 인민위원회와 남로당원, 전평세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1946년 초에 결성된 이북청

년단체들과 서북청년단은 이후 1946년 대구사태와 1947년 3.1절 사건을 거치면서 준군사조직으로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서북청년단원들은 토지개혁, 친일청산, 소련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직접적인 월남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인민위원회와 북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에 따른 빈농과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장이 근본적인 결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점령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남하한 서북청년단원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이북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유한 집단유형에 속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함병선 등의 이북출신 군인, 경찰, 관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서북청년단원들은 서로 교유 관계 및 지연과 학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북청년단의 반탁운동은 보수적인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북에서의 정치적 상황과 동일하게 남한에서도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또는 남로당), 그리고 전평 등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 등의 좌파는 토지개혁, 친일청산 등의 개혁과 찬탁(후견제)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부상은 서북청년단뿐만 아니라 미군정, 임정과 한민당 등의 우파 정치세력, 그리고 지주와 기업인에게 위협요소였다. 대체로 미군정의 하지를 비롯하여 한민당 등의 보수적인 집단들은 친일청산, 토지개혁 등의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좌파세력을 정치적으로 차별하였고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미군정 하지는 좌우합작운동을 통하여 조선공산당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미군정과 우익 정치집단은 좌파가 과도입법의원선거로 정치의 중심무대를 장악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 결과 좌파 세력은 비민주적이며 비정상적인 선거절차를 통해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다. 미군정기의 식량난과 실업 등으로 인하여 좌우 노동단체가 전국적으로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우파 노총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용한 반면에 10·1 대구사태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소련의 양군 동시철병 주장이 보도되자, 한민당은 좌파의 테러가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미군정과 지배집단은 대구사태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서북청년단은 대구지역에 남선파견대를 파견하여 테러를 일으켰다. 그리고 1947년 3월 이후 제주도에 입도한 서북청년단은 제주도를 ‘작은 모스크바’로 표현하는 등 좌파 세력에 대한 색출과 제거를 목적으로 폭력을 가

하였다.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의 백색테러는 미군정 경찰 수뇌부에 의해 비호를 받았다. 서북청년단은 경무국장 조병옥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장택상도 서북청년단의 테러행위를 격려하였다. 장택상은 좌익 소탕에 성과가 컸을 때는 우익청년들의 합숙소를 은밀히 찾아가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하였다. 미군정 하지가 좌익의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을 해산시킴과 동시에 무차별적인 테러로 문제가 되었던 서북청년회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을 때, 조병옥은 “북한 공산치하에서 가혹한 비민주적 독재 정치에 사달려 갓은 고역을 다 맞본 젊은 청년들이 고향과 부모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고 월남한 그들에게 다소 불법성이 있었다고 해서 서북청년회와 같은 열렬한 반공우익청년단체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미군정의 본래의 임무와 사명에 어긋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또 따라서 서북청년회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로서만은 남한의 치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는 실상이므로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서북청년단을 비호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친일 기업인과 한민당의 김성수로부터 수차례에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았다. 조선민주당의 이종영은 평안청년회가 1946년 3월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소련영사관 투석사건하고 각 우익청년단체 간부들에게 인원 동원을 중용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였다.²²⁾ 이종영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조선군 참모장, 헌병사령부 특고과장 밑에서 해외 망명중인 항일운동가와 가족들을 구속했으며, 교회 박해에 앞장선 혐의로 1949년 체포되어 반민법정에 서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 그는 대동신문을 만들어 반공투쟁에 열을 올렸다.

서북청년단은 반탁을 중심으로 극우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좌파에 대해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미군정, 우익정치 세력, 기업인과 대토지 소유주 등은 서북청년단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형성하였다. 기업인과 전통적인 특권층이 서북청년단에 재정적 후원을 하며 경제적 후견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미군정 관료들은 식량배급 문제와 경찰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점차 물리적 충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경찰과 군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47년 3월 이후 제주도에 입도한 서북청년단은 점차 경찰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

22) 이경남, 1989, 앞의 책, p.36.

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한국의 독립문제의 국제화와 5·10 선거를 반대하는 집단을 색출하는 등 5·10 선거실시와 관련하여 현상유지의 동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 해 볼 때,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현상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4절 세속적 차원의 동기

민병대 출현과 실업 및 토지 상실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Dyer, 1997 ; Falk & Zweimüller 2005 ; Freilich & Pridemore 2005).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서북청년단은 “끼니를 위해 반공전위역”이라는 청부테러단(박명림 1988)으로 인식되었다. 월남청년들의 실업과 식량난은 서북청년단 충원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시라소니 등 일부 집단이 세속적 이득을 위해 서북청년단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서 교사와 서기 등으로 일했던 월남민들 중 재정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자 CIC 에 근무하게 되는 등 실업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월남 청년들의 친구와 지인 등 사회적 관계도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세속적 차원의 폭력은 미군정 관료, 보수적인 기업인과 정치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진압군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서북청년단의 세속적 이득을 위한 폭력 양상은 이북청년단체의 결성 초기부터 나타났으며, 전평에 대한 테러를 통해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즉, 물질적 이득을 위한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해방 후와 제주 4·3 사건 등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임일은 조선일보와 대한독립신문사에 다이내마이트 폭과 위협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진용동지회는 사무실을 놓고 대동청년단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여러 귀속기업체에 월남청년들을 소개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947년 봄 모든 학원이 국립서울대학수립안 반대투쟁으로 혼란할 때, 서북청년단은 유억겸 문교부장을 협박하다시피 하여 월남학생들을 서북청년단위원장(선우기성)의 확인증명만으로 대거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평안청년회의 운영자금은 군정청에서 피난민에게 배급되는 구호품 이외에 평안도 출신 유지들의 자금지원과 무엇보다도 대공투쟁에 따른 수수료(지방과건)로 조달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강탈, 절취, 강제모금에 의한 자금조달도 계속되었다. 대공투쟁을 위한 서북청년단의 활동 자금은 서북청년단이 원조를 요청한 각 지방단서 필요 경비를 수수되는 것 외에 서북출신 군정청관리들을 이용하여 원조물자를 유출하고 그것을 부정판매하여 얻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미군정청 주요 부처에는 상공부장 오정수를 비롯하여 보건후생부장 이용설, 인사행정처장 정일형, 문교차장 오천석, 사법차장 한근조, 상역국장 한승연 등 많은 현직 관리들이 평안도 출신이었다. 월남 피난민들에게는 군정청에서 쌀, 보리, 밀가루, 옥수수 등 양곡과 이불, 담요, 의류 등을 유·무상으로 배급해 줄 때였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북출신 현직관리들과 짜고 유령통장(피난민 증명서를 2배로 늘린 것)을 만들어 배급을 2배로 타냈다.²³⁾ 이와 같이 타낸 구호품은 우선적으로 대원들의 생활에 쓰고 나머지는 시장에 유출시켜서 상당한 추가이익을 얻어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살림살이를 부정배급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어서 이북출신 실업가들에게 기부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²⁴⁾

그리고 경제적 지위, 노동 등의 일자리 획득을 목적으로 전평 세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전평에 대한 테러로 함북청년회, 황해청년회, 대학혁신청년회, 양호단 등은 합동작전으로 소위 ‘공장 탈환작전’을 펼쳤다. 46년 8월 21일 경성방직 평정작전은 경성방직 임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안청년회는 인천의 노동자 단체에 대한 테러에 앞장섰다. 한국민주당과 독립촉성국민회의 곽상훈과 정해궁의 요청으로 46년 7월 20일, 석재민, 박청산, 김관호 등 서북청년단원을 인천에 파견하고 46년 8월 30일 인천지부를 결성하였다. 평안청년회의 인천지부 결성 이후 이들은 인천의 주요 공장들을 ‘평정’하고 대한노총을 설치하였다.²⁵⁾

서북청년들의 좌파 테러는 보수집단의 금전적 지원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서북청년단원들은 점차 경찰과 군으로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제주도 파견을 위해 서북청년단원들에게 경찰의 지위가 주어지자 이들은 이에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육사 5기와 7기로서 군에 진출하게 되었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서북청년단의 문봉제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치안국장, 국무원사무국장, 교통부장관 등을 지냈다. 이처럼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와 결합하며 현상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23) 경향신문, 1947년 5월 1일자.

24) 문봉제, “서북청년회(32)”, 중앙일보, 1973년 1월 31일자.

25) 선우기성, 1976, 앞의 책, p.680.

면서도 세속적 이익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서북청년단의 세속적 폭력은 진압작전 측면의 색출과 학살 과정 속에서 민간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도 나타났다. 서북청년단은 강제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와 총격을 가하기도 하였다.²⁶⁾ 서북청년단의 물질적 이득을 위한 폭력행위는 민간인의 물품을 갈취하는 등 후원금 이외의 사적인 동기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서방이 면에 다녔어도, 아이를 호적에도 못넣고, 나도 그 때 호적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 못했고, …… 시집 호적에 남편이 올리려고 하다가 죽어 버렸으니 혼인 신고도 못했지요. 도장을 가지고 가서 남편이 신고하려고 할 때에 죽어 버렸으니까. …… 시계를 달라고 하면 쥐버릴 것이지, 안 주니까 차에 오르라고 해서 멀쩡한 사람을 태워 가서 말도 안 들어보고 죽여 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남편은 그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갔는데 한 두 시쯤에 기별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 차에 실어갔다고. 실어갔다고 해도, 무슨 재주로 함덕애를 잡니까. 가질 못하고, 그저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저녁때 되니까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²⁷⁾

서북청년단은 자신들의 위신을 위해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949년 초 서북청년단이 제주신보가 진압작전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집장을 구타하였다.

제주신보가 서청의 감정을 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청은 자신들의 권능확대를 위해 신문사를 빼앗은 것 뿐입니다. 다만 ‘봉개리 작전’ 때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습니다. 1949년 초 2연대 2대대(대대장 이석봉 대위)의 주도 아래 경찰, 서청, 대청이 총동원된 작전입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만 신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일체 쓰지 못했고 군에서 발표하는대로 ‘정당한 군의 작전’으로 다뤄야했습니다. 그런데 서청은 이 작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난 후 하루는 서청대원들이 신문사에 들어와 김석호 사장을 구타했습니다. 그날밤 나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2시께 들이닥친 서청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김재능 단장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당시 30대 중반인 김재능은 키가 6척이나 되는 장신으로 콧수염을 길렀고 일본놈들이 신던 긴 가죽장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는 위낙 악명이 높아 큰 키에 휘적 휘적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지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구타했습니다. 그냥 구타가 아니고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내가 초주검이 되자 김재능은 ‘데려가 처리해!’라고 하더군요. 서청은 날 태우더니 총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

26) 임복순 용 증언,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제주:각, 2004, p.129(재인용).

27) 한장만 증언, 오성찬, 1989, 앞의 책, p.73.

족들이 나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수소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함병선(咸炳善) 2연대장이 나를 살려 주었습니다. 2연대에서는 내게 군복을 입히고 편집국장 대신에 선무공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²⁸⁾

서북청년단의 세속적 차원의 폭력 동기는 조직 결성 이후부터 제주 4·3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북청년단원들의 세속적 차원의 폭력은 권력, 우익 정치세력, 그리고 군부 특히 함병선 등 토벌대 지휘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서북청년단의 세속적 차원의 폭력은 유재홍 사령관에 의해서 그들의 비리가 적발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저지로 인해 감소된 바와 같이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세속적 차원의 폭력이 발현되었다.

제6장 결 론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은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련군정의 실시로 인해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 등 좌파 계열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친일청산과 토지개혁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소련군정은 친일청산, 토지개혁,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정책을 제도적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초기에 인민재판 형식의 친일청산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친일청산은 제도적으로 온건하게 추진되었다. 토지개혁 과정을 통해서 지주계층과 교회의 토지가 부분적으로 몰수되었다. 또한 일제시대에 교육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은 소련군정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적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빈농과 노동자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성장하게 되었지만, 조선민주당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혜를 향유해 왔던 집단은 그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초기 소련군정에 협력적이었던 조선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이후 탁치문제로 인해 소련군정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들이 월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도 자발적이고 단독적인 월남인들이 존재하였다. 1946년 초 이북의

28) 김용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pp.173-174.

일부 청년들은 월남의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남한에서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련의 점령정책과 해방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빈농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은 이북청년단체와 서북청년단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

한편 해방 이후 남한에서 소외계층의 귀국과 더불어 친일청산, 토지개혁, 그리고 찬탁을 주장하던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실에 기인한 월남민들이 남한의 좌파세력에 테러를 자행하는 등 극우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북청년단 및 이북5도 출신의 청년단체들은 반탁과 반공을 중심으로 극우주의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정과 보수 정치 세력은 서북청년단과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후견관계를 형성하면서 소련점령 지역과 남한에서 각종 테러 행위를 지원하였다. 한편으로 남한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월남 청년들이 극우 청년단체에 충원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실업 및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서북청년단은 보수주의 정치세력과 협력하여 전평 등 좌파세력에 대한 테러를 가하며 직업과 세속적 보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서북청년단의 전평과 민청 등 인민위원회와 남로당에 대한 테러는 대구 사태와 제주 4·3 사건에서 극에 달하였다. 특히 서북청년단의 제주도에 대한 ‘작은 모스크바’와 같은 공세적 태도는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반발을 일으키며 제주 4·3 무장봉기의 한 계기가 되었다. 무장봉기 발발 이후,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서북청년단을 증파시켰다.

서북청년단의 극단적 행위는 이데올로기적 동기, 군사적 동기, 정치적 동기, 그리고 세속적 차원의 동기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좌파 계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서북청년단의 행동강령에 ‘반공’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소위 ‘적색분자’ 색출과 소개령에 따르지 않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서북청년단과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및 군인들은 도피자 가족 등 무장대에 협력한다고 의심되는 민간인을 색출하여 고문을 하거나 사적으로 처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군사적 차원의 동기가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서북청년단 폭력의 군사적 차원의 동기는 응원경찰대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차원이 서북청년단 폭력에 고유한 요인으로 간주하게 어렵다.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는 정치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의 동기에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우선 정치적 차원의 동기를 살펴보면, 이북지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향유해왔던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들은 소련군의 진주와 일련의 체제 개혁조치로 인하여 지위가 박탈 혹은 위협에 직면한 결과, 월남을 단행하였고, 신탁통치 논쟁의 상황에 놓여 있던 와중에 남한에서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5·10 선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와 폭력을 자행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독립 문제의 국제화를 방해하는 세력을 척결한다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내세우게 되었고 5·10 선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테러를 강화하였다. 제주 4·3 사건의 주요한 발발 원인이 5·10 선거 저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기득권 수호라는 현상유지 동기가 서북청년단의 폭력 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세속적 차원의 동기를 살펴보면, 실업과 식량난 등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서북청년단 구성원들은 조직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방정국의 경제적 요인은 월남민들이 서북청년단 충원의 동기로 작용하였지만 제주 4·3 사건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원들은 경찰로서 더 나은 지위 획득을 위한 동기로도 제주 4·3 사건에 개입되었다. 서북청년단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 물질적 이득, 사회적 지위 등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세속적 차원의 동기가 작용하였다. 현상유지의 동기의 결과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정치 영역에서 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서북청년단 일반 단원들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과 군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내 연구》

- 강인철, 1999, “미군정기 남한 유입인구의 사회인구학적 분석과 정치적 효과.” 강인철 외 저,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167-202, 춘천:한림대학교출판부.
- 강정구, 1992, “해방 후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93-132, 서울: 풀빛.
- 강정구, 1996, 『분단과 한국전쟁의 현대사』 서울:역사비평사.
- 고준석 지음·박기철 옮김, 1989, 『한국경제사』 서울:동녘.
- 고현욱, 1991, “북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이행.”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121-138,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진관, 1992, “1920-30년대 급진주의 시대에 있어서 민중과 교회.” 김홍수 엮음,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7-24,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기광서, ‘친일파 처리, 그 배제와 수용의 메커니즘’
<http://www.koreanhistory.org/webzine/read.php?pid=6&id=79>(검색일:2008년 11월 16일)
- 김두섭, 1999, “미군정기 남한인구의 재구성.” 강인철 외 저,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145-166. 춘천:한림대학교출판부.
- 김광열, 2001, “1920-30년대 조선인 독일의 원인.”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호, 35-70.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서울 : 선인.
- 김국태 엮음, 1984, 『해방3년과 미국 I』, 서울: 돌베개.
- 김귀옥, 2002,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민영, 1995, 『재일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서울:한울.
-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제61호, 679-311.
- 김성보, 1993,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Vol.77-79, 861-891.
- 김성보, 1995,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과 농촌 계층 구조 변화 - 결정과정과 지역

- 사례.” 『동방학지』, Vol.87, 51-106.
- 김성보, 2004, “지방사례를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사회의 갈등과 변동: 평안북도 선천군.” 『동방학지』, 125권, 169-261.
- 김수자, 1999,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년).” 『역사와현실』, 제31권, 156-190.
- 김인덕, 1996,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서울:국학자료원.
- 김점곤, 1974,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서울:박영사.
- 김점숙, 1999,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50년) 물자수급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화 외, 1969, 『북한연구자료집 1』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진형, 1995, “미군정기 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0, “1945-1948년 우익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그레고리 핸더슨 지음·박행웅·이종삼 옮김,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한울아카데미.
- 나민수, 1996, “남북한의 농업정책 비교.” 『산업연구』, 제7호, 1-36.
- 도우현, 1976, “한국의 농업분화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Vol.12 no.2, 1-173.
- 류상영, 1989, “해방 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정해구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51-107, 서울:한길사.
- 마크 게인, 1986, 『해방과 미군정: 1946.10-11』, 서울:까치
- 박명립, 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일규, 2002,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2권, 제1호, 303-324.
- 박찬기, 2008, “헤즈볼라(Hezbollah)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48집, 3호, 199-231.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 선인.
- 서정민, 2008, “A Coparative Study of Political Violence in Algeria and Mexico.” 『중동연구』 제27권 1호, 127-171.
- 송건호, 1985,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39-64, 서울:까치.

- 신상준, 1994, “주한미군정청의 해외귀환동포 및 월남민에 대한 구호행정.” 『복지행정논집』, Vol.4, 5-40.
- 안상정, 1991, “민족청년단의 조직과정과 활동.”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양정심, 2008, 『제주 4·3항쟁』 서울:선인
- 오미일, 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 서울:한울 아카데미.
- 오유석, 1988, “미군정 하의 우익 청년단체에 관한 연구:1945-1948.”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수, 2003, “해방 직후 남·북한의 친일파숙청 논의 연구.” 『전남사학』, 제20집, 23-50.
- 이광린, 1983, “개화기 관서지방과 개신교.” 숭실대학교 『기독교연구논총』, Vol.1, 29-50.
- 이동원·조성남, 1997, 『미군정기의 사회 이동』,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동현, 1989, “한국 신탁통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선, 1983, “북한출신 월남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대식, 1999, “제주 4·3 항쟁과 우익청년단.”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 4·3 연구』, 205-237, 서울:역사비평사.
- 임종명, 1994, “조선민족청년단 연구-미군정의 향후 한국의 주도세력 양성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운철, 2005, “북한 공산정권에 의한 함경도 교회의 피해(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석, 1991, “해석학 논쟁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제문제.”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1, 435-465.
- 전현수, 1993, “해방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역사와현실』, 제10호, 295-313.
- 정인섭, 1996,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 서울대출판부.
- 정종식, 2007, “서북청년단의 결성과 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제임스 I. 머트레이 저·구대열 옮김,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서울: 을유문화사.

조형·박명선, 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비교.” 변형윤 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145-168, 서울: 까치.

존 메릴, 1995, “제주도의 반란.”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17-75, 서울: 온누리.

찰스 암스트롱 지음·김연철·이정우 옮김, 2006, 『북조선 탄생』 서울: 서행문집.

최동주, 2006, “저개발국 내전 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모델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363-391.

허호준, 2008, “제주 4·3 사건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 논리 - 대게릴라전을 중심으로.” 제주 4·3 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41-175.

《해외 연구》

Alvarez, Alex., “Militia and Genocide.” *War Crimes, Genocide, & Crimes against Humanity* Vol.2 2006, 1-33.

Avilés, William., “Institutions, Military Policy, and Human Rights in Colombi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116, Vol.28 No.1, January 2001, 31-55.

Besançon, Marie., “Relative Resources: Inequality in Ethnic Wars, Revolutions, and Genocides.” *Journal of Peace Reseach* Vol.42 No.4, 2005, 393-415.

Blalock, H. M., Jr,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 New York:Wiley.

Bunce, Arthur C., 1944, “The Future of Korea - Part 1.” *Far Eastern Survey*. Vol.13, No.8, Apr, 67-70.

Carey, S. C., “Rebellion in Africa: Disaggregating the Effect of Political Regim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44 No.1, January, 2007, 47-64.

Armstrong, Charles K., 2004,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Collier, Paul & Hoeffler, Anke., “Greed and grei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 Vol.56, 2004, 563-595.

Dyer, J., 1997, *Harvest of rage: Why Oklahoma City is only the beginning*, Boulder, CO: Westview.

- Falk, Armin., & Zweimüller, Josef., 2005, "Unemployment and Right-Wing Extremist Crime", March 2005, IZA DP No.1540.
- Feilich, J. D., Pichardo Almanzir, N., & Rivera, C., 1999, "How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explicitly and implicitly promote deviant behavior: The case of the militia movement", *Justice Quarterly*, Vol.16, 655-683.
- Francisco, Ronald A., "Coercion and Protest: An Empirical Test in Two Democratic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0 no.4 1996, 1179-1204.
- Freilich, J. D., & Pridemore, William Alex., 2005, "Reassessment of State-level Covariates of Militia Group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23. 527-546.
- Gibson, J. William., 1994, *Warrior Dreams: Paramilitary culture in post-Vietnam America*, New York: Hill & Wang Pub.
- Hegre, Havard & T Ellingsen, & S Gates, & NP Gleditsch., "Toward a Democratic Civil Peace? Democracy, Political Change, and Civil War, 1816-199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5 No.1 2001, 33-48.
- Henderson, Errol A. & Singer, J. David., "Civil War in the post-colonial world, 1946-92."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7, No.3, May, 2000, 275-299.
- Humphreys, Macartan & Weinstein, Jeremy M., "Who Fights?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Civil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2 No.2 April 2008, 436-455.
- James I. Matray, 1985,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James I. Matray, 2002, "Bunce and Jacobs: U.S. Occupation Advisors in Korea, 1946-1947." Bonnie C. Oh,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61-78, Praeger Publishers.
- Kowaleski, David., 1992, "Counterinsurgent Paramilitarism: A Philippine Case Stud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9, No.1, 71-84.
- Langer, Arnim., 2004, "Horizontal inequalities and violent conflict: the case of Côte d'Ivoire." Crise working paper No.13 November.
- Lichbach, Mark Irving, 1989, "An Evaluation of 'Does Economic Inequality Breed

- Political Conflict? Studies.” *World Politics* Vol.41, No.4, July, 431-470.
- Lipset, S. M., 1981, *Political M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 Raab, 1970, *The Politics of Unreason*, Univ of Chicago Pr.
- Mauceri, Philip., 2007, “Private Armed Forces in State and Society: Death Squads, Paramilitarys, Mercenaries and Warlords.”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48th Annual Convention, Hilton Chicago, CHICAGO, IL, USA, Feb 28.
- Moore, Will H., 1998, “Repression and dissent: Substitution, context, and tim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2, July, 851-873.
- Müller, EN., 1985, “Income Inequality, Regime Repressiveness, and Political Viol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0, 47-61.
- Müller, EN & Seligson, M. A., 1987, “Inequality and Insurgen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No.2, June, 425-452.
- Murshed, S. Mansoob & Scott Gates, 2005, “Spatial - Horizontal Inequality and the Maoist Insurgency in Nepal.”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9 No.1, 121-134.
- Nzongola-Ntalaja, Georges., 2004, “Citizenship, Political Violence, and Democratization in Africa.” *Global Governance* Vol.10, 403-409.
- Prunier, Gérard., 2007, *Darfur*, Cornell University Press.
- Reynal-Querol, Marta., 2002, “Ethnicity, Political Systems, and Civil Wa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6, 29-54.
- Sambanis, Nicholas., 2001, “Do Ethnic and non-Ethnic Civil Wars Have the Same Caus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5 No.3, 259-282.
- Sambanis, Nicholas., 2004, “Using Case Studies to Expand Economic Models of Civil War.” *Perspectives on Politics* Vol.2 No.2 June, 259-279.
- Sanín, Francisco Gutiérrez., 2008, “Telling the Difference: Guerrillas and Paramilitaries in the Colombian War.” *Politics & Society*, vol.36, Mar, 3-34.
- Spalding, Nancy., 2000, “A Cultural Explanation of Collapse into Civil War: Escalation of Tension in Nigeria.” *Culture Psychology*, Vol.6 No.1, 51-87.

- Tolnay & Beck, 1995, *A festival of violence: An analysis of southern lynchings, 1882-1930*, Urba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Vladislav Zubok, & Constatine Pleshakov, 1996,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US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athersby, K., 1993,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odrow Wil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No.8.
- Weede, Erich., 1987, "Some new evidence on correlates of political violence: income inequality, regime repressive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3 No.2, 97-108.
- White, Robert., 1989, "From Peaceful Protest to Guerilla War: Micromobilization of the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No.6, 1277-1302.

《기타》

1) 국외자료집

-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2, 문서철 34.
- CIA, "Communist Capabilities in South Korea." ORE 32-48, 21 February 1949.
- CIG, "The Situation in Korea"(ORE 5/1), 3 January 1947.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미군정정보보고서』, 서울:일월서각.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미군정정보보고서』, 서울:일월서각.
- Hq. USAFIK, *Weekly Activites of PMAG*.
-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no.775009.
-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South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4, July-August 1948.
-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FRUS*, 1946, Vol.8.

2) 국내간행물 및 자료집

- 경찰종합학교, 1994, 『경찰50년사:1945-1994』 서울:경찰종합학교.
- 국방부, 1996, 『호국전몰용사공훈록 제1권』, 서울:국방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3사건 토벌작전사』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건군사』 서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1996, 『대한민국사자료집-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서울:국사편찬위원회.

국토통일원, 1986, 『북한 경제 자료집』, 서울:국토통일원.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서울:은누리.

김시훈, 2009, 증언록 『소외된 전선, 한라산』

문봉제, ‘그 때 그 사람, 서북청년단과 문봉제’, 북한연구소, 『북한』 1989년 4월호.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1946,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북한연구소,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황해도편』, 서울: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 서울:북한연구소.

선우기성·김판석, 1969, 『청년운동의 어제와 내일』, 서울:햇불사.

선우기성, 1976, 『한국청년운동사』, 서울:선문사.

오성찬, 1989, 『한라의 통곡소리』, 서울:소나무.

윤장호, 1995, 『호국경찰전사』 서울:제일.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사 상』 서울:삼성문화개발.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하』 서울:삼성문화개발.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1』 서울:전예원.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2』 서울:전예원.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3』 서울:전예원.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4』 서울:전예원.

제민일보 특별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5』 서울:전예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조선은행, 1948, 『조선경제연보』

통일부, 2000, 『북한개요』, 서울:통일부.

태흥초등학교, 『서기 1949년 이후 학사보고철』

태흥초등학교, 『단기 4282년도 이강 직원 명부철』

국회사무처, 1948, 『국회속기록, 제1회』, 서울:국회사무처

현대조선문체강좌편집위원회, 1988, 『북한의 경제』, 광주:도서출판 광주

3) 신문자료

경향신문, 1947년 5월 1일자.

경향신문, 1948년 4월 3일자.

경향신문, 1948년 4월 7일자.

국방일보, 2004년 8월 5일자.

대동신문, 1948년 6월 16일자.

독립신보, 1947년 2월 12일자.

독립신보, 1948년 4월 7일자.

독립신보, 1948년 5월 4일자.
동광신문, 1948년 4월 13일자.
동광신문, 1949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 1945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 194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1946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1946년 12월 1일자.
동아일보, 1947년 5월 24일자.
동아일보, 1947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 1948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 1948년 4월 4일자.
동아일보, 1948년 11월 5일자.
동아일보, 1949년 5월 26일자.
민주일보, 1948년 11월 24일자.
부인신보, 1948년 08월 22일자.
서울신문, 1946년 1월 25일자.
서울신문, 1946년 10월 5일자.
서울신문, 1948년 4월 7일자.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24일자.
서울신문, 1948년 9월 23일자.
서울신문, 1948년 12월 8일자.
서울신문, 1948년 12월 10일자.
서울신문, 1948년 12월 15일자.
우리신문, 1948년 5월 8일자.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자.
조선일보, 1946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1946년 1월 2일자.
조선일보, 1946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1946년 1월 9일자.
조선일보, 1946년 2월 1일자.
조선일보, 1948년 4월 6일자.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자.
조선일보, 1948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1948년 9월 1일자.
조선일보, 1948년 9월 7일자.

조선일보, 1948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1949년 4월 27일자.
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자.
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자.
중앙일보, 1948년 9월 7일자.
중앙일보, 1949년 6월 12일자.
중앙일보, 1970년 8월 17일자,
중앙일보, 1972년 12월 21일자
중앙일보, 1973년 1월 31일자.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자.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자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자.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한성일보, 1948년 10월 23일자.

4) 인터뷰 자료

김시훈 옹의 증언(2009년 3월 29일).
이동백 옹의 증언(2009년 5월 10일).

5) 인터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